

‘잠재성장률 2% 제고’를 위한

知識經濟

Knowledge Based Economy

2010. 가을호



특집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I. 총론 :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II. 한국1등기업의 혁신능력 평가
- III. 외국인투자 부진과 활성화 과제

최근 기상이변의 파급영향 및 과제

일본의 2030년 경제발전전략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知識經濟

2010. 가을호

- 특집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총론 :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한국 1등기업의 혁신능력 평가
 - 외국인투자 부진과 활성화 과제
- 최근 기상이변의 파급영향 및 과제
- 일본의 2030년 경제발전전략

발 행 인 : 김주현
편 집 인 : 유병규
편집위원 : 김동열, 박덕배, 임희정
발 행 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13 Fax. (02)2072-622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2072-62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知識經濟

Knowledge Based Economy Research Report

차 례

□ 핵심 내용

□ 기획 특집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총론: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6
- 한국1등기업의 혁신능력 평가 / 30
- 외국인투자 부진과 활성화 과제 / 44

□ 국내 이슈 연구

- 최근 기상이변의 파급영향 및 과제 / 59

□ 해외 사례 연구

- 일본의 2030년 경제발전전략 / 70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잠재성장률 하락의 추이와 전망

2000년 이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폭이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70년대 초반 10%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8~9%대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로 4%대 후반까지 하락하였다. 1999년 이후에는 IT 산업의 성장세로 5% 중후반까지 재상승 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 국내 주요기관들도 2011년 이후 국내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잠재성장률 하락의 8대 원인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투입의 감소와 인력 활용이 미흡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성장률 둔화와 빠른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와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들도 심화되고 있다. 둘째, 취약한 대학교육과 기업의 훈련시스템으로 고급 기술인력 양성과 인적 자본의 형성이 취약하다. 기업의 교육훈련비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경쟁력 순위도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셋째, 자본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투자가 위축되었다. 기업의 자본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1970년대 평균 14.9%에서 2006~2009년 1.4%로 떨어졌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를 제외하곤 부진하다. 넷째,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이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노동생산성도 2000년 66.1%에서 2007년 44.6%로 하락했다. 다섯째, 내·외수 단절 심화와 선순환 구조의 약화이다. 높은 대외의존도는 내수시장의 확대를 더디게 하여 수출이 내수와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켰다. 여섯째,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도 약화되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계 위주로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와 산업지원 기능이 약화되었다. 또한, IMF 이후 외국인의 빈번한 단기 투자자금 유출입도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일곱째,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쏠림현상이다. 90년대 이후 연구개발비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낮아지고 대기업과 일부산업 분야로의 쏠림현상은 확대되고 있다. 여덟째,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갈등구조의 고착화이다. 낮은 사회적 자본과 기업가 정신의 위축, 계층·기업·지역간 양극화, 남·북한간 갈등이 고착화되는 것도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고용창출과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3%대 중반까지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5%대로 제고(2%p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점 정책과제를 구성요소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투입의 증대 차원에서, 퍼플 잡과 가족친화경영의 활성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늘리고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고령화 대비도 필요하다. 아울러 인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대학교육 혁신, 세계 100위 대학과 지역별 거점 대학의 육성, 두뇌유출 방지와 해외두뇌 유치에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유턴을 촉진하며,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중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①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부품·소재분야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지원기능 복원 등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해야 한다. ②연구개발 패러다임을 2등에서 1등 전략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투자분야의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③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회통합과 신뢰수준의 제고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한국1등기업의 혁신능력 평가

■ 혁신능력,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소

심화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는 R&D 경쟁력이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기업들은 경제위기를 세계시장 재편의 기회로 인식하고 공격적인 R&D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한국, 미국, EU, 일본의 1등기업 간 혁신능력 비교

(개관) 한국의 산업별 1등기업은 미국, EU, 일본의 1등기업에 비해 혁신능력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산업에서 한국1등기업은 세계1등기업을 3년 내에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전자정보통신산업에서는 추격이 정체되어 있다. 자동차산업 및 중공업(조선산업 포함)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으며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전자정보통신산업) 한국1등기업(삼성전자)의 2008년 R&D 투자규모는 미국1등기업(Microsoft)의 3/5 수준, EU1등기업(Nokia)의 3/4 수준이고, 한국1등기업의 R&D 집중도(매출액 대비 R&D)는 5.75%로 Microsoft의 15.42%, Nokia의 10.4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1등기업이 경쟁기업에 비해 R&D전략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동차산업) 한국1등기업(현대자동차)의 R&D 투자규모는 일본1등기업(Toyota)의 1/6 수준, 미국1등기업(GM)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1등기업의 R&D 집중도는 2.75%로서, 선발기업인 GM, Volkswagen, Toyota, Ford의 5.37%, 5.21%, 3.65%, 4.23%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후발기업인 Honda의 4.90%, Daimler의 4.63%, Nissan의 4.23%, BMW의 5.38%, Peugeot의 4.36%, Renault의 6.12%보다 낮아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철강산업) 한국1등기업(POSCO)은 적극적인 R&D 투자전략으로 EU1등기업(Arcelor-Mittal)의 R&D 투자규모를 넘어섰고, 일본1등기업(Nippon Steel)과의 격차를 좁혀 3년 내에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변화가 느리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낮은 철강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POSCO가 공격적인 R&D 투자전략을 통해 세계1등기업을 추격한 좋은 사례다.

(중공업) 한국1등기업(현대중공업)의 R&D 투자규모는 미국1등기업(Volvo)의 1/15 수준, EU1등기업(Caterpillar)의 1/12 수준에 불과하고, 현대중공업처럼 조선업에서 시작한 일본1등기업(Mitsubishi 중공업)에 비해서도 1/9 수준에 불과하다. R&D 집중도도 업계 평균인 2.68%보다 현저하게 낮은 0.64% 수준이다.

■ 세계1등국가 추격을 위한 정책과제

(기업과제) 첫째, 산업별 한국1등기업들은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공격적인 R&D 전략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의 한국1등기업이 R&D 증가율을 현재의 9.2%에서 15%까지 상향조정한다면 5년 내에 경쟁사인 EU1등기업을 추월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 한국1등기업은 2.75%에 불과한 R&D집중도를 업계 평균인 4.43%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중공업 한국1등기업도 0.64%에 불과한 R&D집중도를 경쟁사인 일본1등기업의 3.37%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R&D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을 중시하는 혁신문화를 형성하며, 근로자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과제) 첫째, 현재 대기업·중견기업에 적용되는 R&D투자 관련 세액공제 비율은 3~5% 수준인데, 이를 선진국 수준인 10~1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세계1등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세액공제 이외에도 정부R&D투자, R&D 인프라 구축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부정책을 민간기업과 함께 수립, 시행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부진과 활성화 과제

■ 외국인직접투자 부진 현황과 특징: 제조업 비중 급락, 조세피난처 비중 증가

먼저, FDI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152.5억 달러→ 114.8억 달러)에 있으며, GDP대비 비중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둘째, FDI의 산업별 추이를 보면 제조업에 유입되는 FDI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도에는 32.4%까지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66.1%에 달했다.

셋째, 지난 10년간 업종별 추이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 화학, 운송용기계 등 3개 분야 비중이 전체의 68.1%에 달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업이 35.6%,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이 각각 10.2%, 11.5%로 높은 비중이다.

넷째, 국가별 FDI의 추이를 보면, 최근 10년간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전통적 투자국가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영국 캐나다 중국 등 신흥투자국들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활용한 FDI의 비중은 '90년대 평균 0.6%에서 최근 10년 평균 1.5%로 2.5배 급증했다.

다섯째, 형태별로 보면, 공장을 세우기 위한 그린필드형 FDI의 비중이 '04년 52%까지 감소했으나, '05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09년에는 71%까지 높아졌다.

여섯째, 투자시점별 FDI 비중을 보면 신규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 비해, 기존 투자기업들의 증액투자 비중이 지난 10년 평균 52.5%로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곱째,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시기에 1억 달러 이상 대형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 그리고 오만과 편견

먼저,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성장률, IT인프라 등으로 평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잠재력은 세계 1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비해, 유치 성과는 2000년 92위에서 2008년 123위로 크게 떨어져 여전히 '잠재력 이하 그룹'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2001년 2,956억원에서 2007년 4,75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투자유치금액은 감소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 2004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유치된 FDI는 전체 FDI의 3.3%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FDI 유치금액의 감소추세에는 변화가 없다.

아울러, FDI와 관련된 오만과 편견의 실상을 살펴보면, 외투기업이 자기 권리는 철저히 요구하지만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불평등 계약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외투기업은 연구개발이 활발하고 기술이전을 잘 하고 조세감면 등 특혜를 선호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 과제: 한국형 FDI 모델과 경제자유구역의 리모델링 필요

우리는 자동차, 정보통신과 같은 제조업이 강하고, 국민소득 1만7천 달러의 중진국으로서, '잠재력 이하 그룹'에서 잠재력도 높고 성과도 좋은 FDI '선도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서비스업-M&A형-증액투자 등 선진국형 FDI 모델로 전환하기 보다는 제조업-그린필드형-신규투자를 중시하는 한국형 FDI 모델이 여전히 중요한 시점이다.

투자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세감면 인센티브는 점차 줄여나가고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금지원제도를 늘려나가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점차 줄이면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등 FDI 관련 제도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백화점식·저인망식 투자유치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6개 경제자유구역도 지역여건에 맞게 차별화·특성화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고 병원과 학교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최근 기상이변의 파급영향 및 과제

■ 최근 기상이변 현상과 원인

최근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가 확대되며 일상화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폭설과 이상 한파, 3~4월에는 이상 저온현상, 6~8월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으며, 9월22일 추석 연휴에는 시간당 100mm안팎의 집중호우로 수도권외 1만1천여 가구가 침수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기상이변이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지난 100년간 국내 기온상승은 지구평균(0.74℃)의 2~3배를 상회하고 있고 해수면상승 속도도 지구평균(매년 1.8mm)보다 빨라 기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이러한 기상이변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기상이변에 따라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은 물론 농산물가격의 급등, 산업 피해, 질병 증가, 위험회피(보험) 비용의 발생 등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 국내 기상이변의 파급 영향

먼저, 기상재해의 강도가 심해지고 피해액도 커지고 있다. 재해당 사망자 수가 '90년대 7.6명에서 2000년대 17.5명으로 늘었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액도 '90년대 6.3조원에서 2000년대 19조원으로 3배 이상 커졌다. 또한, 기상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신선채소 물가지수가 2010년4월 전년동월비 28.9% 급등한 후 6,7,8월 3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20%이상 증가하여 물가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기상이변은 건설업이나 물류, 유통업 등 기상상태에 민감한 산업의 생산과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난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연간 약1,2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기상이변은 질병의 증가를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말라리아의 국내감염환자 비율이 '93년 33.3%에서 2009년에는 98.1%로 증가했으며, 발병환자수도 '95년의 139명에서 2009년 1,345명으로 최근 10년간 급증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등 이상기후 관련 보험료와 보험계약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회피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풍수해보험의 계약건수는 2006년 1.7만 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34.9만 건으로 급증했으며 보험료도 각각 6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 시사점 및 정책 과제

빈번해지고 일상화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차원의 재해 대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재해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기상이변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배수시설 등 水防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정확한 기상예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상 관련 2010년도 R&D 예산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우리의 21배, 일본은 2.3배 많다. 기상용 슈퍼컴퓨터도 우리는 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16대, 미국 277대에 달한다. 셋째, 기후변화의 진행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강풍과 폭우, 폭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량, 건물, 주택 등 시설물의 준공허가 및 개보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기후중립적 농법의 개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수확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후중립적 농법의 개발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상이변에 대한 적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 예방대책의 수립이다.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백신개발과 확보,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상정보 관련 민간서비스업과 관련 보험업 등 신종비즈니스의 육성이 필요하다. 최근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을 통해 기상관련 정보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기상재해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 등 뉴비즈니스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의 2030년 경제발전전략

■ 지금 왜 일본에 국가전략이 필요한가?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이미 인구감소는 시작되었고 2015년부터는 세대수 감소도 시작될 예정인 바, 일본경제의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은 1970년대 초반 석유위기,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20년마다 구조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 바,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인 2030년을 대비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일본경제의 장기전망과 경제발전 전략의 방향성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중국의 GDP가 2030년경에는 미국 수준에 도달하여 명실 공히 G2 시대가 열릴 것이다. 2030년 이후 세계경제의 중심이 구미에서 동아시아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일본 경제는 명목GDP 기준으로 2010년 중국에 의해 추월당했고, 2030년에는 인도에 의해 추월당할 전망이다. 일본의 '19세 이하와 65세 이상' 인구를 '2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로 나눈 종속인구 지수가 2005년 6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40년경에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역세대 1인이 연소자 및 고령자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다.

정점에 도달한 일본의 가계소비와 저하 경향이 뚜렷한 주택투자, 공공투자, 설비투자,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을 감안한다면, 내수 또는 외국인자본 도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인구규모의 축소와 시장규모의 상대적 축소라고 하는 2가지 축소 국면에 처한 일본의 입장에서 아시아의 외수를 타겟으로 하여 아시아와 함께 번영하는 성장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 2030년을 향한 일본 경제의 3가지 발전전략: 수출 증대, 수입 감소, 대외투자 확대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폭을 과거처럼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가 동시에 필요하며, 소득수지 흑자를 늘리기 위해 대외투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1) 새로운 수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기술력에 의존한 제품판매형 수출전략이 아니라, 일본의 經驗知를 활용한 수출전략, 건강-친환경-세련미와 같은 라이프스타일 제안형 수출전략, 제도와 규칙을 선도하는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일본에서 소비할 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없는 품목의 수입총액을 삭감해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도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도 그 일환이다.

(3) 대외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득수지 흑자의 확대를 위해 아시아 각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비제조업 분야의 인수합병과 도시 인프라 건설, 수도사업과 같은 종합사업형 투자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1. 잠재성장률 하락의 추이와 전망

○ 2000년 이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¹⁾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폭이 더욱 크게 확대됨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80년대 고성장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은 81~85년까지 평균 3.3% 성장에서 90년대 초반까지 하락하였으나, 90년대 중후반기에 IT 산업의 성장으로 1996~2000년까지 평균 4.3%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0년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음
- 일본, 독일, 영국 등도 80년대 비교적 높은 성장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06~2010년에는 평균 0%대로 떨어짐
-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80~90년대 평균 9~10%대의 고성장에서 90년대 7~5%대로 떨어졌고, 2000년대 중반까지 4.5%, 후반기에는 평균 3.5%로 하락
-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미국,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률이 더욱 크게 저하됨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0.4%(전기대비 연율)에서 2009년 -2.6%로 떨어졌고 영국과 독일 등 유럽지역의 2009년 경제성장률도 -4.9%로 크게 하락
- 반면, 한국은 기조효과와 수출 감소폭 축소 등으로 2009년 연간성장률이 0.2%로 플러스를 기록하였고, 2010년 들어서도 전년동기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음

<주요국의 기간별 경제성장률 평균 추이>

(%)

	'81~'85	'86~'90	'91~'95	'96~'00	2001~'05	2006~'10
미 국	3.3	3.2	2.5	4.3	2.4	1.2
일 본	3.1	4.8	1.5	1.0	1.3	0.0
독 일	1.2	3.5	2.2	2.0	0.6	0.6
영 국	2.1	3.3	1.7	3.4	2.5	0.5
한 국	9.0	10.4	7.9	5.4	4.5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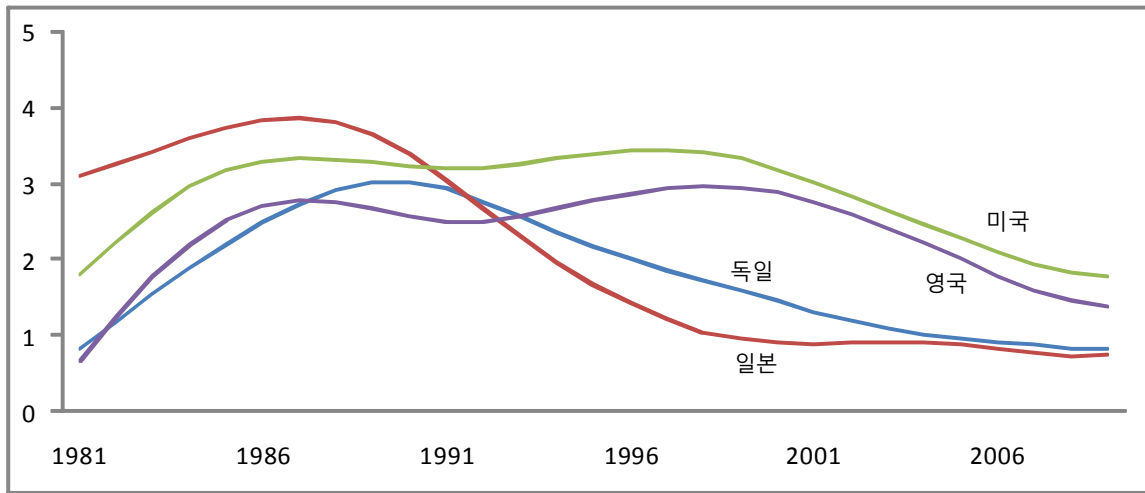
자료: IMF.

주: 1) 2010년은 IMF의 각국 성장률 전망치임.

1) 잠재성장(Potential GDP)률이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 자본 및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 GDP수준으로 정의되는데 이 때,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차이인 총수요갭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잠재GDP는 총수요와 총공급 수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요국들의 잠재성장률도 1990년대 이후 하락세를 지속
 -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중반부터 01년까지 3%대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2000년대 들어 2%대로 하락하였고 금융위기로 1%대로 떨어짐
 - 독일도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2~3%대를 보였으나 이후 1%대로 낮아졌고 2005년 이후에는 0%대로 떨어짐. 일본도 90년대 초반까지 2~3%대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0%대로 하락

<주요국의 잠재성장률(%) 변화 추이>



자료: IMF. 현대경제연구원.

주: 주요국의 잠재성장률은 단순추세법²⁾으로 추정된 자료임.

- 특히, 주요국들의 잠재성장률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하락하면서 위기 이후에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OECD가 2009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08년까지 미국과 영국의 잠재성장률은 2.4%와 2.2%였고, 일본과 독일은 1.0%와 1.2%를 기록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2010년 미국과 영국의 잠재성장률은 각각 1.5%와 1.3%로 하락하였고 일본과 독일은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짐

2) Hodrick-Prescott (HP) 필터링 방식은 변수를 매우 부드럽게 추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자주 사용됨. 잠재성장률의 추정은 실질GDP를 y 라고 하면 HP 필터에 의해서 추정되는 y 의 추세치 y^* 는 최소화된 시계열값($\text{Min} \sum (y_t - y^*_t)^2 + \zeta (\Delta \Delta y^*_t)^2$)으로 정의되며 이때 전반부를 최소화시키면 추세선이 실제 시계열과 근접하게 되고, 후반부를 최소화시키면 추세선 변화율의 변화가 크지 않도록 추세선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게 됨.

·한편, 2010년 5월 발표한 자료에서 추정된 2012~2025년까지의 중장기 잠재성장률 전망치도 미국 2.3%, 일본 0.9%, 영국 1.8%, 독일 1.3%로 금융위기 이전 2006~2008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잠재성장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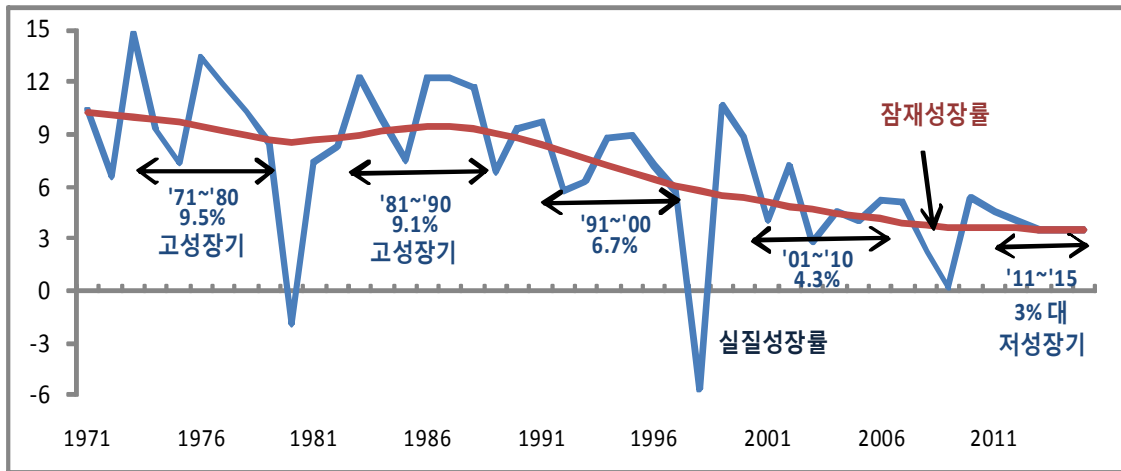
	2009년 6월 추정치			2010년 5월 추정치	
	2006~2008	2009~2010	2011~2017	2010~2011	2012~2025
OECD 평균	2.1	1.4	1.7	1.2	1.9
미국	2.4	1.5	2.0	1.4	2.3
일본	1.0	0.6	0.8	0.8	0.9
독일	1.2	0.8	1.1	1.2	1.3
영국	2.2	1.3	1.7	1.2	1.8
한국	-	-	-	4.0	2.4

자료: OECD, 2009년 6월, 2010년 5월.

○ 국내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여 2010년 이후 3% 중반에 머물 전망

- 국내 잠재성장률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으며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도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70년대 초반 10%대에서 7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반까지 8~9%대를 유지하였고 1998년 IMF 외환위기로 4% 후반까지 하락하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IT 산업의 성장세로 5% 중후반까지 재상승
- 그러나, 2004년 이후 국내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0년대에는 지속적인 잠재GDP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GDP가 이보다 더 낮아 지는 모습을 보이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
- 1980년대는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0.7%p 높게 나타났으나, 2000년대에는 큰 폭으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에도 실질성장률이 이보다 0.2%p 더 낮게 나타남

<국내 실질 및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잠재성장률은 단순추세법(H-P 필터링)을 이용.
2) ↔는 잠재성장률의 구간 평균치임.

- 국내 주요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4%로 낮아졌고 2010년 이후에는 3%대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생산함수 모형을 활용한 국내 평균 잠재성장률이 80년대 7.8%에서 2004~08년 중에는 4.1%로 낮아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평균 3.7%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
-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80년대와 90년대 각각 평균 8.6%와 6.3%에서 2000년대 초반 4.4%로 떨어졌으나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4.9%로 상승하고 2011~2020년에는 4.3%대로 재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

<주요 기관의 국내 잠재성장률 최근 추정치>

기관	연도	'71~'80	'81~'90	'91~'00	'01~'10	'11~'15
	추정치		9.5	9.1	6.7	4.3
NABO	연도	'81~'90	'91~'00	'01~'08	'04~'08	'09~'13
	추정치	7.8	6.0	4.2	4.1	3.7
한국은행 KDI	연도	'82~'90	'91~'00	'01~'05	'06~'10	'11~'20
	추정치	8.6	6.3	4.4	4.9	4.3
대한상의	연도	'86~'90	'91~'00	'96~'00	'01~'05	'06~'09
	추정치	10.1	7.5	5.4	5.1	3.0

자료: 기관별 발표 자료 참조.

2. 잠재성장률 하락의 8대 원인

○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의 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생산함수 모형에서 자본·노동과 같은 요소투입의 변화와 경제시스템, 연구개발(R&D), 사회적 자본 등을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을 활용,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GDP(Y_t)는 총요소생산성(A_t), 노동투입(L_t), 자본투입(K_t)의 함수로 정의

$$* Y_t = A_t L_t^a K_t^{1-a} \text{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 노동투입은 노동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인적 자본)을 고려하고, 자본투입은 총고정자본형성과 투자자금 유입 등 자본스톡의 증감을 고려
- 총요소생산성은 산업간 생산유발효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금융의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 등 경제시스템, 연구개발의 효율성, 사회적 자본 등의 3가지 하부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우리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생산요소 투입 주도의 성장 단계에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단계로 이전³⁾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잠재성장률의 구성요소와 하락 원인>

잠재성장률 구성요소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
요소 투입	노동	量的 투입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활용도 미흡
		人的 자본	- 취약한 대학교육 및 훈련시스템
	자본		- 자본수익률 하락과 국내투자 위축
총요소 생산성	경제시스템 (산업구조, 연관효과등)		-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 - 내·외수 단절과 산업연관효과 하락 -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 약화
	연구개발 (R&D 투자 및 효율성)		-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쓸림현상
	사회적 자본 (신뢰, 통합, 투명성 등)		-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갈등 구조 고착화

3) 한상곤('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현대경제연구원, 2008.1)과 임희정('산업별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8.3)의 연구를 참조.

1) 인구구조의 변화와 활용도 미흡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여성·청년의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노동 투입이 감소되고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
 -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1.15명으로 떨어지면서 인구성장률도 '70년의 전년대비 2.21% 성장에서 2009년 0.29%로 하락
 - 반면, 고령화 지수는 1970년 7.2에서 2009년 63.5로 8.8배나 상승
 -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경제활동참가율도 2005년 61.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09년 60.8% 기록했으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5년 73%에서 2030년 64%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청년·여성의 고용률 하락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조적 문제는 금융위기로 더 악화
 - 20~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2000년 60.1%에서 2009년 58.2%로 2.0%p 낮아졌고, 실업률은 2000년 이후 7%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열악한 상태
 - 완만하게나마 상승하던 여성의 고용율도 2007년 48.9%에서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악화되며 2009년 47.7%로 1.1%p 하락

<인구구조 변화 통계 추이>

(단위 명 %)

	1970	1980	1990	2000	2005	2007	2008	2009p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21	0.33	0.31	0.29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47	1.08	1.25	1.19	1.15
생산가능인구 비중	54.4	62.2	69.3	71.7	71.7	72.0	72.3	72.6
고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3	55.1	59.3	63.5
경제활동참가율	57.6	55.9	60.0	61.2	61.9	61.8	61.5	60.8
청년고용률	-	-	-	60.1	61.2	60.0	59.1	58.2
여성고용률	38.2	41.3	46.2	47.0	48.4	48.9	48.7	47.7

자료: 통계청.

-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2.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 중 15~64세의 인구비중임.
- 3. 고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 4. 청년고용률은 20~29세의 고용률로 한정하고,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임.

- (생산성 저하) 고임금, 고비용 구조에 따라 노동비용은 상승하였으나 노동생산성 저하는 고착화되고 있어, 노동투입의 증가에 따른 성장이 한계에 도달
-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2.5% 상승하였으나, 2008년에는 3.5%, 2009년에는 3.0%로 노동비용은 증가세를 지속
- OECD에 따르면, 상대적 단위노동비용(Relative Unit Labor Costs) 지수(2005=100)도 2005년 100에서 2009년말 66.1로 떨어지면서 실질실효 가치가 크게 하락
- 반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2005년 기준)는 2006년 전년대비 8.0% 상승하였으나 점차 낮아져 2008년 말에는 3.3% 상승에 그침

2)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못 미치는 취약한 교육훈련시스템

- (취약한 교육훈련시스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적 자본의 중요성⁴⁾이 커지고 있으나, 국내 인적 자본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태에 있음
- 우리나라의 대졸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여전히 저조함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졸자 비율은 2007년 25-34세 인구 중 56.0%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대학교육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조사에서는 총58개국 가운데 46위에 그침

<대졸 인구비율 및 대학교육의 수요충족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기타
대졸 비율	싱가폴 58.7%	한국 56.0%	캐나다 55.0%	일본 54.0%	대만 53.0%	독일(34위) 23.0%
대학교육의 수요충족도	싱가폴 8.26	아이슬란드 8.04	스위스 7.95	핀란드 7.73	캐나다 7.66	한국(46위) 4.28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주: 대졸비율은 25세-34세 인구 중 대졸자의 비중. 수요충족도는 대학교육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며, 미국 10위, 독일 17위, 대만 20위, 일본 36위를 기록.

4) 인적 자본의 성장기여율이 제조업에서는 '91~'97년중 6.5%에서 2000~2005년중 10.8%로 높아졌으며, 서비스업에서도 각각 4.6%에서 17.1%로 상승(최요철·김은영, '산업별 인적자본의 추계와 성장요인 분석', 조사통계월보 2007년2월호, 한국은행)

- (기업 교육훈련비 하락) 2000년대 들어 기업의 교육훈련비 비중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기업체의 노동비용에서 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1년 1.6%에서 '97년 1.9%까지 올라갔으나, 2000년 이후 하락하여 2009년 0.6%까지 떨어짐
 - 특히,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크게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직업훈련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기업의 교육훈련비 비중> (%)

연도	1991	1993	1995	1997	2000	2003	2006	2009
비중	1.6	1.8	1.5	1.9	1.4	1.5	0.9	0.6

자료: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各年度.
 주: 교육훈련비/노동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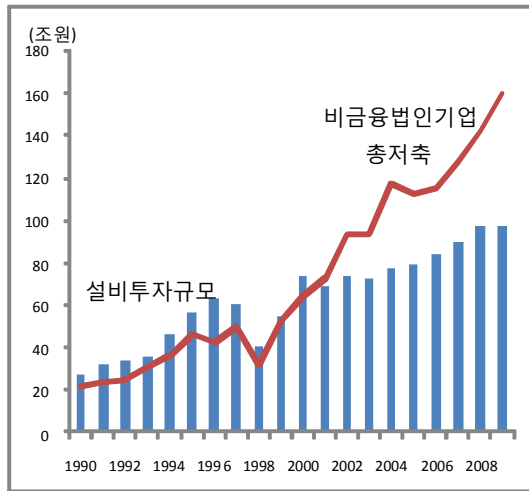
3) 국내투자 위축과 자본수익률 하락

○ 외환위기 이후 내수시장 위축으로 인한 투자 감소와 해외로 유출되는 투자자금 확대 등으로 국내투자는 정체

- (국내투자 위축과 자본수익률 하락)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으로 국내 투자가 축소
 - 2001년 이후 설비투자는 오랫동안 정체된 반면, 비금융법인기업의 총저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72조원에서 2009년 160조원으로 2.2배 증가
 -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1970년대 평균 14.9%에서 80년대 12.8%로 하락하였고 2000년대에는 하락폭이 확대되며 2006~2009년 평균 증가율이 1.4%로 떨어짐
 - 특히, 설비투자 증가율은 1970년대 평균 20%에서 2000년대 이후 평균 1%대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자본수익률이 명목기준으로 1990년대 10%에서 2000년 들어 7~8%로 떨어졌기 때문⁵⁾으로 판단됨

5)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실물자본 수익률 추정과 시사점' 서원석 외, 2007.2.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와 총저축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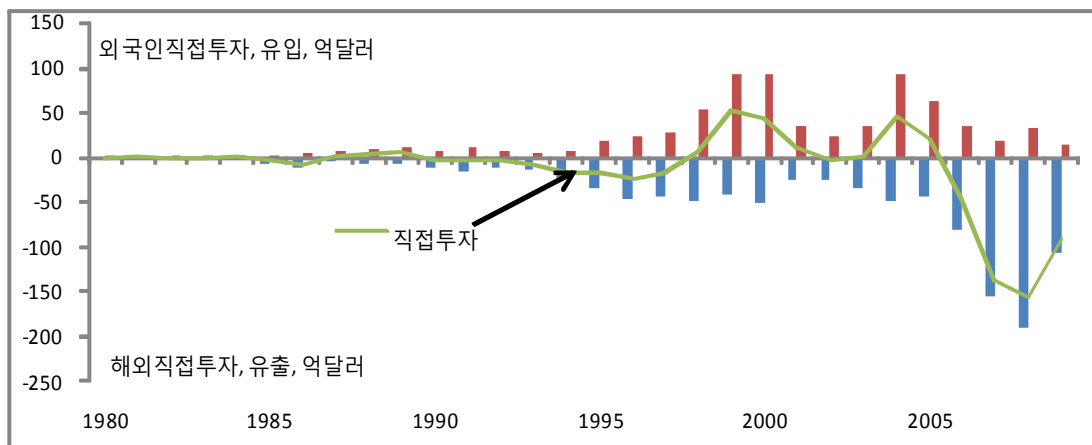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추이>

	'71~ '80	'81~ '90	'91~ '00	'01~ '05	'06~ '09
총고정자본형성	14.9	12.8	5.5	3.2	1.4
설비투자	20.3	12.6	9.1	1.3	1.9
건설투자	11.3	12.9	3.4	4.4	0.9

자료: 한국은행.

- (해외직접투자 자금 큰 폭으로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자금 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유출되는 투자자금은 크게 증가
 - 직접투자수지는 IMF와 카드사태 시기에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액 급증으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1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감소
 - 반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IMF 이후와 카드 사태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저축률 하락으로 투자재원도 감소) 저축률 하락에 따라 국내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워지고 자본축적을 위축시킴으로써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 1980년대 후반 이후 총저축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음
-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보여주는 개인 순저축률도 1996~2000년 기간 중 평균 15.5%로 전기대비 5.9%p 감소하였고, 2006~2009년 기간 중에는 평균 3.3%로 급락하여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컸음을 보여줌

<총저축률과 개인부문의 순저축률 평균 추이> (%)

	'75~'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09
총저축률	27.5	28.2	37.8	36.9	34.7	31.9	30.5
개인 순저축률	10.2	11.8	22.4	21.4	15.5	5.0	3.3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개인 순저축률은 개인 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의 비율이며, 재화와 서비스 구입(최종 소비지출)에 쓰고 남은 금액(순저축)의 순처분 가능소득 대비 비율임

4)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

○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에도 생산성은 여전히 낮고 취업유발계수도 크게 감소

- (서비스업 비중은 지속 증가)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 1990년 이후 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30.3%에서 2007년 40.4%로 빠르게 확대된 가운데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의 비중은 축소됨

<산업별 총생산 비중 추이> (%)

	1990	1995	2000	2005	2007
농림어업	5.1	3.8	2.8	2.1	1.8
광업	0.5	0.4	0.2	0.2	0.1
제조업	49.6	47.6	46.0	46.3	46.5
전력·가스 및 건설	12.2	11.6	9.4	9.5	9.3
서비스업	30.3	34.1	39.4	40.0	40.4
기타	2.3	2.5	2.2	2.0	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 **(서비스업의 절대 규모는 여전히 협소)** 국내 서비스업 시장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⁶⁾
 - 2007년 국내 서비스업의 명목가치는 약 5,800억 달러로 주요 선진국들 평균의 19%에 불과
 - 경제규모의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내수 시장/GDP 비중도 한국은 2007년 기준 55%로 주요 7개국 평균 63% 보다 낮은 수준임
 - 주요국의 서비스 내수 시장/GDP 비중은 미국 69%, 일본 72%, 프랑스 69%, 독일 63%, 이탈리아 63%, 스페인 59%, 영국 65% 임

-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거의 정체 상태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에서 2007년까지 63.9%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동기간 10.5% 증가로 거의 정체 상태
 - 특히, 국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90년 G7 평균의 38% 수준에서 2007년에 70%로 상승하였으나,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G7평균의 57% 수준에서 42% 하락⁷⁾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달러,%)

	전산업	제조업(A)	서비스업(B)	B/A
2000	25,235	31,726	20,964	66.1
2005	29,099	43,681	22,194	50.8
2007	31,365	52,004	23,181	44.6
2000~07 평균	28,056	40,233	22,004	54.7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 2009.

- **(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도 크게 하락)** 모든 산업의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도 큰 폭으로 하락
 - 서비스의 생산성 저하와 제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로 취업유발효과는 지속적으로 하락. 자동차가 1980년 10억원당 131.2명에서 2005년 11.07명으로 반도체가 동기간 173.24명에서 7.43명, 도소매업도 316.8명에서 30.12명으로 급락

6)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의 원인과 시사점', 2010.6.

7)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의 원인과 시사점', 2010.6.

<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

(단위: 명/10억원)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5
자동차	131.20	72.18	45.11	23.69	14.65	11.70	11.07
컴퓨터	131.85	59.43	46.22	25.42	9.46	7.04	7.47
철강	67.64	43.49	29.61	14.58	7.34	6.89	4.31
반도체·전자부품	173.24	85.38	46.61	15.14	7.42	7.80	7.43
도소매서비스	316.76	189.49	100.78	61.74	46.08	39.68	30.12
금융·보험	171.87	89.87	51.03	35.30	15.61	11.77	10.45

자료: 한국은행.

5) 내·외수 단절 심화로 선순환 구조 약화

- (수출입 규모 확대로 대외의존도 지속 상승)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아 GDP대비 수출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외의존도가 확대
 - 내수와 수출 비중이 1970년 각각 89.4%와 10.6%에서 '97년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내수 65.9%, 수출 34.1%로 내수가 크게 위축됨
 -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990년 49.9%에서 IMF 외환 위기 이후 내수시장 위축으로 50~60%대로 높아졌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92.1%에 달하였으나 2009년말 82.4%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요국⁸⁾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내·외수 비중과 무역의존도 추이 >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시장별	내수	89.4	77.6	78.4	77.9	71.6	71.3	65.9
	수출	10.6	22.4	21.6	22.1	28.4	28.7	34.1
무역의존도		-	-	49.9	49.0	62.4	64.6	82.4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8) 2008년말 기준으로 유럽 최대 수출국인 독일의 무역의존도는 74.8%이며, 중국 58.0%, 일본 29.6%, 미국 23.5% 기록함.

- (내·외수 단절 심화와 부품·소재 산업의 높은 대일 의존도 지속) 높은 대외 의존도가 내수와 투자를 확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1990년 대비 2009년도 수출은 10배 늘어났으나, 내수는 5.3배 증가에 그쳤고, 특히 수출의 성장기여도⁹⁾가 크게 높아짐
 -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기업들이 고용감축, 임금억제, 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수출과 투자의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크게 약화됨¹⁰⁾
 - 2009년 대일 무역적자 277억 달러 중 부품·소재¹¹⁾ 부문만 20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상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 특히, 높은 對중국 의존도는 중국 경기 변동이 국내 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쳐 국내 성장률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전체 무역흑자의 80% 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2009년 중국 무역의존도는 20.5%로 일본과 미국을 합한 20.1% 보다 높음
- 대외거래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사업 환경의 개방성(Openness)과 관련한 지표의 국가 비교에서는 여전히 하위를 기록 (아래 표 참조)

<대외 개방도 측정요인별 순위>

	전체 순위	이민법	관세율	보호주의	FDI (%/GDP)
뉴질랜드	20	17	3	5	50
아일랜드	21	1	11	3	29
영국	22	3	11	30	25
한국	23	56	53	49	52
프랑스	24	16	11	45	23
벨기에	25	6	11	33	2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 9)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소비와 투자 보다 높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도 2000~2004년 평균 0.8%p에서 2005~2009년 평균 1.3%p로 확대됨.
- 10) 수출-내수 간 연계약화로 독일은 1991년 1/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 수출은 2.4배 증가하였으나 내수는 19% 증가에 그쳤고, 일본도 2002년 경기회복세 이후 수출은 51% 증가한 반면 내수는 4% 증가에 그침(한국은행, '수출-내수 간 연계 약화- 독일·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외, 2007.1.)
- 11) 2001년 이후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흑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2006년부터는 전산업 무역흑자 규모를 추월하였는데, 전체 부품·소재 수출입 중 중국의 비중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2배 이상 확대된 반면, 대일 의존도는 적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비중은 점차 완화됨.

<부품소재 대중 대일 무역수지 추이(억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일무역적자	▽105	▽118	▽139	▽161	▽161	▽156	▽187	▽209	▽201
대중무역흑자	41	54	106	159	200	198	190	135	337

자료: 지식경제부.

6)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 약화

- (금융 부문의 낮은 경쟁력) 국내금융은 선진국 대비 자금중개기능 약화, 은행 쏠림현상, 낮은 세계화로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낮음
 - 2000~2008년 민간부문의 자금조달비중은 대출이 85%를 차지하는 반면 회사채 발행(5%), 주식발행(10%)은 15%에 불과함
 - 세계은행에 따르면, 상위 3사 은행의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CR3가 2007년 기준 한국은 0.53으로 미국 0.34, 일본 0.46에 비해 높음
 - 국내은행의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TNI(Trans National Index)*지수¹²⁾는 4.3%인데 미국 24.7%, 독일 42.7%, 영국 40.3%로 주요 선진국의 1/10 수준에 불과
 - IMD의 따르면, 국내 금융부문경쟁력은 2006년 37위, 2010년 38위로 여전히 낮음

* TNI지수=(해외자산/총자산)+(해외수익/총수익)+(해외인력/총인력)*100/3

- (은행의 산업지원기능 약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위주의 경영과 대기업의 내부자금을 통한 자금조달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는 지속되고 있어 금융-산업 간 지원기능은 약화
 - 1999년 예금은행의 대출금 중 산업대출금¹³⁾은 68.4%를 차지했으나 이후 가계 위주의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도의 산업대출금 비중은 57%로 낮아짐

<예금은행의 대출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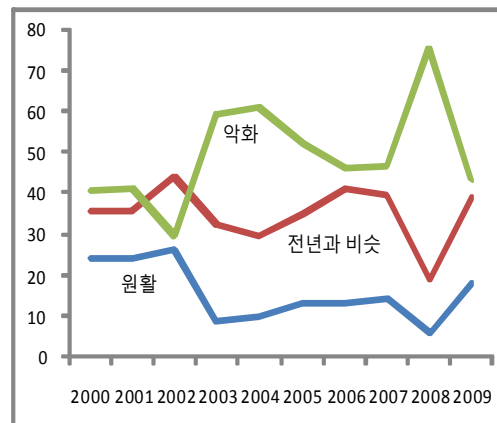
(단위: 조원, %)

	'99	'00	'03	'05	'07	'09
대출금	250.2	310.8	538.3	613.9	803.7	953.5
산업대출	171.1 (68)	201.9 (65)	284.5 (53)	308.4 (50)	440.0 (55)	544.0 (57)
가계대출	79.1 (32)	108.9 (35)	253.8 (47)	305.5 (50)	363.7 (45)	409.5 (43)

자료: 한국은행.

주: ()는 총 대출금 대비 비중임.

<중소기업 자금조달 사정>



자료: 중소기업청.

12) 한국금융연구원 외,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심포지엄, 2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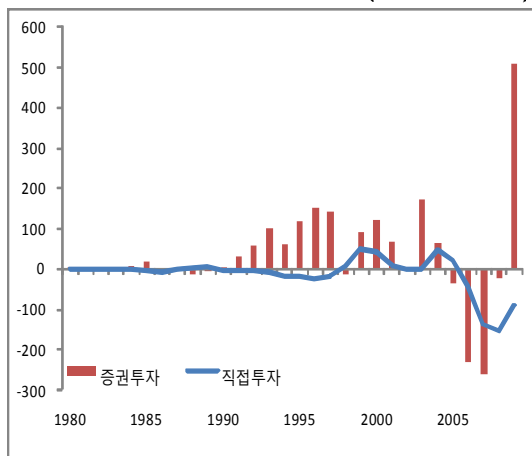
13)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총대출금 중 산업대출금은 717.4조원으로 56.4%, 가계대출금은 554.2조원으로 43.6%를 차지.

- 기업의 총자금조달 중 내부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009년말 기준 30대 기업의 현금유보율은 3,000%를 넘어서 일부 대기업은 자금 수요요인이 낮음
- 반면, 중소기업은 낮은 매출이익률 등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50%대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단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
- 빈번한 단기 외국인 투기자금의 유출입은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켜 경제 안정성을 저해하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¹⁴⁾으로 작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전분기대비 28% 평가절하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후에도 국내 외환시장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
- 반면, 2010년 유럽재정위기로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변동폭은 2010년 1/4분기 6.3%, 2/4분기 7.9% 절하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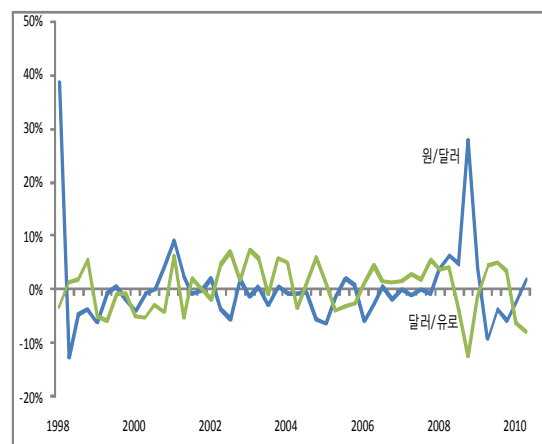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규모와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억달러)



자료: 한국은행.

(%)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분기별 평균자료로 전기대비 변동폭이며, 원/달러 환율은 증가 기준임.

14) 외환위기 이후 환율 상승이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약화되고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환율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가격효과(예: 환율상승→달러표시 수출가격 인하)와 물량효과(예:수출가격 하락→수출물량 증가) 측면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수입에 대한 영향은 가격효과(예: 환율상승→원화표시 수입가격 인상)가 증가한 반면, 물량효과(예: 수입가격 상승→수입물량 감소)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투자유발효과가 약화되었고 수입자본재 경로를 통한 환율상승의 설비투자 감소효과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환율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용복 외, 2009.4.

7)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쏠림현상

- **(연구개발투자비는 크게 증가)** 한국은 지난 90년대부터 연구개발을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R&D 투자규모를 꾸준히 증대시켜옴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전반적인 정체국면을 나타낸 반면 연구개발 투자는 2007년까지 연평균 13.2% 증가하며 규모 면에서 꾸준히 확대됨
 - 이와 더불어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9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3.37%를 기록하였고 이는 OECD국가 중 4위권¹⁵⁾임

<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비 추이 >

(단위: 조원,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8
연구개발투자비	0.01	0.2	3.2	9.4	13.8	24.2	34.5
GDP 대비 비율	0.37	0.56	1.72	2.37	2.30	2.79	3.3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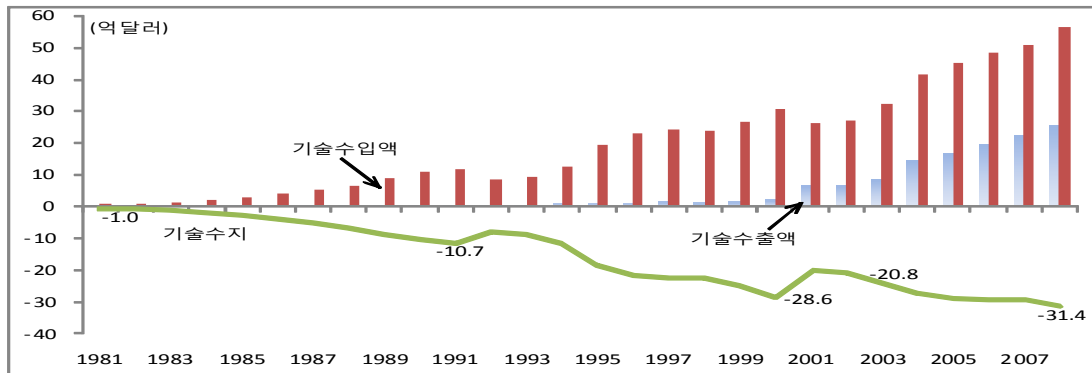
- **(낮은 효율성과 쏠림현상은 확대)**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R&D 투자 절대 규모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점과 쏠림현상은 개선해야 할 과제임
 - R&D 비용의 절대 규모가 미국의 1/9, 일본 1/4 수준으로 낮고 상대적 투자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GDP대비 3국 특허건수¹⁶⁾ 비중도 주요국 대비 낮음
 - 또한,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비중¹⁷⁾이 낮은 점과 기업별 R&D 투자도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3대 산업에의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지속 증가)** 2000년대 이후 기술수출액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 적자가 확대됨
 - 기술수출액이 2000년 2억달러 수준에서 2008년 25.3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기술수입액도 2000년 30.6억 달러에서 2008년 기준 56.7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술무역수지가 2008년 31.4억 달러 적자로 크게 확대
 - 국가별 기술수준을 비교하는 기술무역수지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도 2007년 기준 일본 3.5배, 미국 1.8배, 독일 0.9배이나, 한국은 0.4배로 낮은 수준임

15) OECD의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따르면, 2007년말 기준 GDP대비 연구개발비중은 한국 3.47%, 미국 2.68%, 일본 3.44%, 독일 2.54% 수준이며, OECD국가 평균은 2.29%임.

16)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에 모두 등록된 특허 건수.

17) OECD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주요국의 R&D 예산은 미국 3,688억달러, 일본 1,508억달러, 독일 842.3억 달러인데 한국은 110.9억달러로 절대규모가 상당히 부족하고,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R&D 비중은 75% 수준이나 미국 71.9%, 독일 69.9% 등은 민간부문 비중이 다소 낮은 편임.

<기술무역수지 추이>



자료: OECD.

8)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갈등구조의 고착화

○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신뢰수준은 잠재성장률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

- **(부족한 사회적 자본)** 세계은행(2007)의 자료¹⁸⁾에 따르면, 1인당 사회적 자본 순위에서 한국은 118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며,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OECD 평균 1인당 35만3339달러에 비해 우리는 10만7864달러로 1/3에 불과함
- **(낮은 신뢰)** 세계가치조사 결과¹⁹⁾에 의하면 1989년 이후 사회적 신뢰가 하락 추세에 있으며, OECD 국가 평균 신뢰수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의 신뢰수준은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05년 전후 0.050으로 과거에 비해 더 커짐

<우리나라의 신뢰수준 변화 추이>

구분	1989	1994	1999	2005	평균
한국	0.342	0.303	0.273	0.302	0.305
전체 평균	0.339	0.250	0.285	0.289	0.289
OECD 평균	0.374	0.342	0.315	0.352	0.345

자료: 이병기(2009),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

주: 1989년은 1989-1993년 기간의 웨이브, 1994년은 1994-1998년 웨이브, 1999년은 1999-2004년 웨이브, 2005년은 2005-2008년 기간의 웨이브를 의미.

18) World Bank(2007),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19) 세계가치조사(www.worldvaluessurvey.org)는 Rosenberg(1956)에 의해 개발된 지문, 즉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을 사용하여 사회적 신뢰를 측정(이병기(2009)).

○ 계층·기업·지역·남북간 양극화와 갈등이 고착화되고 있음

- (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소득 5분위 배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이 2003년 전국가구 4.44배에서 2009년 4.92로 확대되었고, 도시가구는 동기간 4.24배에서 4.94배로 격차가 더 확대됨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가구 (2인이상)	4.44	4.61	4.75	4.82	4.97	4.97	4.92
도시가구 (2인이상)	4.24	4.42	4.55	4.62	4.86	4.87	4.94

자료: 통계청.

주: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소득 20%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 (기업간 격차 확대)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1970년 97.1%에서 2008년 99.5%로 더욱 커짐
 -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생산지수는 2003년 14.3p에서 2009년 18.3p로 확대되었고 노동생산성 격차는 2003년 중소기업이 18.2p 높았으나 2009년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9.1p 높아지며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기업별 R&D 투자규모도 2009년 기준 대기업이 전체 규모의 84.1%를 차지²⁰⁾하고 있어 대·중소기업의 미래 경영여건을 더욱 양극화시킬 수 있음

<대·중소기업간 생산 및 노동생산성 격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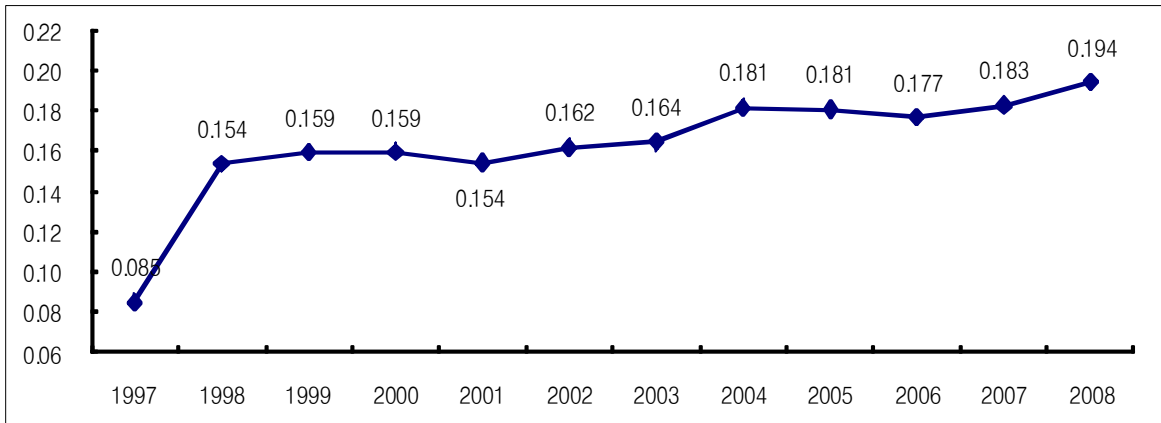
구분		2003	2005	2007	2009
생산 지수	대기업	81.2	100	118.1	125.0
	중소기업	95.5	100	112.7	106.7
노동생산성 지수	대기업	77.9	100	126.2	133.4
	중소기업	96.1	100	114.9	114.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국회 입법조사처(2010), 이슈와논점 97호 재인용).

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 이주량 외, 2010.7.

- **(지역간 소득격차 심화)** 지역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수도권 집중도 심화됨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를 활용하여 지역간 소득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계산해 본 결과 1997년 0.085에서 2008년 0.194로 2배 이상 커짐²¹⁾

<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



자료 : 통계청, KOSIS.

주 : 가중변동계수도 지니계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지역간 불균등도의 심화를 드러냄.

- **(지정학적 리스크와 잠재성장률)** 남북관계의 경색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되며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²²⁾
·천안함 사건이 발표된 5월 26일 기준 원화 환율은 이전 고점인 4월 26일 대비 13.5%, 주가지수(KOSPI)도 동 기간 중 9.2%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가와 환율 등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임.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북한이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남북한 통일 경제로 나아갈 경우 2050년 경에는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들의 GDP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²³⁾
- **(남북경협액의 편익 141조 원)** 1989년 이래 2008년까지 20년간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 등 평화비용의 지출을 통해 얻은 편익은 약 141조 원으로 추정됨²⁴⁾
·1989년 이후 평화비용은 3조 9,100억 원이 지출되었으나, 144조 5,500억 원의 국방비 절약 등으로 약 141조 원의 편익이 발생

21) 현대경제연구원,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 경제주평: 10-03(통권383호), 2010.1.22.

22)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시장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현안과 과제:10-14, 2010.6.1.

23) 골드만 삭스(2009.9)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낮은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증가율, 통화가치 상승 등으로 통일 한국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함.

24)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평가와 개선과제', 통일경제:09-03(통권 3호), 2009.7.31.

3.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까지 9%대의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4%대에 이르렀으며, 2011년 이후에는 3%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고용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4만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3%대 중반까지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5%대로 제고하는 것이 시급함
- 따라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p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성장률의 구성요소별로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例示)>

구성요소		정책 과제	세부 내용
요소 투입	노동	量的 투입	- 여성·청년·고령 인력의 활용도 제고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퍼플잡(유연근무) 활성화 - 가족친화경영 지원 -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人的 자본	- 인적 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개혁 및 투자확대 - 수요자 니즈에 맞는 대학교육 - 세계 100위권 대학 및 지역별 거점대학 육성 - 산학연 연계 내실화
	자본	- 투자환경 개선과 해외직접투자(FDI) 활성화 -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 투자관련 규제 획기적 완화 -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 경제자유구역 리모델링	
총요소 생산성	경제시스템 (산업구조, 연관효과등)	-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 금융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지원기능 강화	-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진입장벽 및 투자규제 완화 -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과 부품소재분야 히든챔피언 육성 - 전문 금융인력 양성과 산업지원기능 복원,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연구개발 (R&D 투자 및 효율성)	- 연구개발투자의 패러다임 전환과 효율성 제고	- 1등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도전-실패-재도전의 시스템화 - R&D 투자의 쓸림현상 해소
	사회적 자본 (신뢰, 통합 투명성 등)	- 신뢰, 공정 사회,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 -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 양극화 현상 완화와 사회통합 - 정부-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 - 모든 조직의 사회책임 강화 - 블루오션, 북한시장 개발 - 남북경협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3-1. 노동투입 증대

○ 여성·청년·고령 인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²⁵⁾을 높이고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잠재성장률²⁶⁾을 끌어 올릴 수 있음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한 근무시스템 정착, 출산 후 직장복귀의 장애물 제거 등이 필요 (예: 퍼플 잡²⁷⁾ 활성화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임금피크제의 활성화와 정년 연장, 국민연금의 수급구조 개선 등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장려하는 사회·제도적 여건을 마련
 -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해외 인재들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시스템과 '이민' 관련 제도를 개선함
-
-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청년실업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
 - 2010년 들어 금융위기의 극복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

○ 인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육개혁과 투자 확대

- 대학교육의 특성화와 혁신을 통해 인적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급 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등 질적인 측면의 노력도 필요함
- 변화하는 경제사회의 니즈에 맞도록 대학교육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세계 100위권 대학과 지역별 거점대학을 집중 육성하며, 산학연 협력을 내실화

25) 2009년말 기준 25~54세 여성고용률 59.8%(OECD)를 74% 수준으로 높일 경우 단기적으로 1인당 GDP 0.9%p 향상 (류덕현(2008) 참고)

26) 대니 라이프치거 세계은행 前부총재는 지난 5월18일 개최된 국내 세미나에서 “고령자의 정년 연장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만으로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p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음.

27) 최근 여성가족부는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퍼플 잡(purple job)을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근로자를 퍼플 칼라(purple collar)라고 부르며, 퍼플 잡(purple job)이란 단기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요일제 근무, 재택근무 등과 같은 유연한 근무를 의미함. 또한, 퍼플(purple, 보라색)은 양성 평등과 일-가정의 조화를 상징.

- 이공계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brain drain)을 최소화하고, 고급두뇌의 국내 유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 구조를 구축
- 세계 100위 대학 내 진입과 이과 분야의 노벨상 프로젝트 등 수행

3-2. 자본스톡 증대

○ 투자환경 개선과 해외직접투자(FDI) 활성화

- 2006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수치 적자가 4년 연속 지속되는 등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는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는 감소 추세에 있음
- 분야별 진입규제 완화와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외국어 소통능력 제고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
-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인천, 부산, 광양, 평택, 대구, 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화 전략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3-3. 총요소생산성(TFP) 제고

○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등 경제시스템을 고도화

-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
- 서비스업 중에서도 교육·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수출산업화 전략이 필요
- 소비자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활성화함으로써 세계에서도 통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
- IT제조업과 자동차산업 등 선도업종의 호황이 국내 부품업체나 하청업체의

호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滴下(trickle-down)효과 제고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중견기업(히든 챔피언)의 육성을 통해 산업연관효과를 강화해야, 대기업의 수출 증가가 국내 경기의 호황으로 연결 가능(☞ 滴下(trickle-down), 滴內(trickle-in)효과)
-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신소재분야의 기술력을 제고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정비

○ 전문 금융인력의 양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금융과 산업의 동반성장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기여

-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고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 새로운 금융규제개혁 도입에 따른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 전문 금융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금융허브 발전 전략을 재구성해야 함
-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금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고 기업과 가계에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
-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 도입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을 장기화하고 급격한 유출을 방지해야 함
- 아울러, 반복되는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강화된 글로벌 금융규제 도입이 필요하나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만큼 선별적 도입이 필수적임

○ 연구개발투자의 패러다임을 2등 전략에서 1등 전략으로 전환하고, R&D 투자의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등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연구개발투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과감하게 1등 전략, 즉 ‘스마트 리더’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²⁸⁾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의 쏠림현상도 해소
- 현재의 ‘스마트 팔로어’(Smart follower; 똑똑한 2등) 전략을 ‘스마트 리더’(Smart leader; 똑똑한 1등) 전략으로 전환하며, 과감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도전-실패-재도전’의 시스템을 구축

28)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 강국들의 등장과 세계화의 빠른 진전은 선진국 기술의 창의적 모방과 같은 ‘2등 전략’(스마트 팔로어 전략)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으며, 과감한 도전과 1등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음.

- IT산업과 자동차 등 특정산업에의 연구개발 쏠림현상을 해소하며, 농업과 전통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개발투자의 활성화가 필요

○ 사회 각 부문의 통합력 제고, 신뢰수준 제고,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

- 사회통합, 투명성, 신뢰, 정책의 예측성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함
-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 완화와 통합력 제고를 위해,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지역별 거점대학의 육성과 지역특화 발전 등이 필요
- 신뢰²⁹⁾, 투명성, 반부패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정부 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
-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ISO-26000)이 2010년 말에 발효될 예정으로 있는 바,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조합³⁰⁾,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 남북한의 갈등과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
-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킴과 아울러 '21세기 블루오션'으로서의 북한 시장 개척, 평화비용 절감 등의 장기 효과도 발휘
- 이산가족의 70% 가량이 77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

연구위원 김동열 (2072-6213, dykim@hri.co.kr)

선임연구원 조호정 (2072-6217, chjss@hri.co.kr)

29) 이병기(2009)에 따르면, "신뢰가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 0.5~0.8%p 제고 효과가 있다"고 함.

30) 국내에서도 최근 모 대기업 노조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을 선언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노사간의 투명성 제고, 업무혁신 주도, 생태적 온전성의 유지 등 4가지 실천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한국1등기업의 혁신능력 평가

1. 혁신능력,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소

- 심화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은 기업성과 및 성장잠재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R&D 경쟁력을 꼽음
 - 세계 1000대 R&D 기업의 임원(Senior Executive)들은 기업전략의 핵심요소로 혁신능력을 꼽음 (Booz & Company, 2009, Global Innovation 1000 Survey)
 - 임원의 90% 이상이 기업의 도약을 위해 혁신능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R&D 투자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함
- 경제위기를 세계시장 재편의 기회로 인식하고, 공격적인 R&D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세계적 기업의 임원들은 경제위기가 경쟁자를 제치는 절호의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핵심수단으로 공격적인 R&D 투자전략을 꼽음
 - IBM의 임원인 Adalio Sanchez는 “경제위기가 혁신을 강화하는 촉매제”라고 말했으며, 상당수의 임원들은 “만약 경제위기 때 R&D를 줄인다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인식함
 - 실제로 미국 발 경제위기가 엄습하고 있던 2008년, 1000대 R&D기업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8.6%, 34%씩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R&D 투자규모를 5.7% 증가시킴
- 국내 주력산업별 1등기업과 미국, EU, 일본 1등기업의 혁신능력을 비교분석하고, 세계 1등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한국의 주력산업인 전자정보통신산업,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중공업(조선산업 포함)을 대상으로 주요국의 1등기업을 비교분석함
 - 특히 세계경제위기로 열린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력산업에서 한국기업이 세계 1등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R&D전략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한국, 미국, 일본, EU의 1등기업 간 혁신능력 비교

1) 연구방법 및 자료

○ (연구방법) 산업마다 기술특성과 시장특성이 다른 만큼, 산업별로 혁신능력을 분석하고자 함

- 기술변화가 빠르고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이 중요한 산업일수록 R&D 집중도($\frac{RnD}{\text{매출액}} \times 100$)가 높고 R&D 투자규모가 크며, 특허가 잘 발달되어 있음
- 전자정보통신산업의 평균 R&D 집중도는 6.93%에 달하는 반면 철강산업은 0.80%에 불과함
- 전자정보통신산업에서는 특허 1개를 생산하는데 평균 260만 파운드가 소요되는 반면 자동차산업에서는 그보다 12.4배가 많은 3,250만 파운드가 소요됨
- 이처럼 산업마다 혁신특성이 다르므로, 다른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임

○ (자료)

- 기업의 혁신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R&D 투자규모 및 R&D 집중도, 특허등록 건수를 사용하고,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사용함
- R&D 투자규모, R&D 집중도, 영업이익 관련 자료는 영국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의 “The 2005~2009 R&D Scoreboard: 세계 R&D투자 1000대 기업”을 사용함
- 특허등록 건수는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Patent by Organizations 2004~2008”을 사용함
- 한편 1등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2008년도 R&D투자규모’임

2) 분석 결과

○ (개관) 한국의 산업별 1등기업은 미국, EU, 일본의 1등기업에 비해 혁신능력이 훨씬 뒤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철강산업에서 한국1등기업은 세계1등기업을 3년 내에 추월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전자정보통신산업에서는 추격이 정체되어 있음
- 또한 자동차산업 및 중공업(조선산업 포함)에서 한국1등기업은 미국, EU, 일본 1등기업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으며,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음

(1) 전자정보통신산업

○ (혁신특성) R&D 집중도 및 R&D투자규모, 특허등록 건수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기술변화가 빠르고 R&D투자를 통한 생존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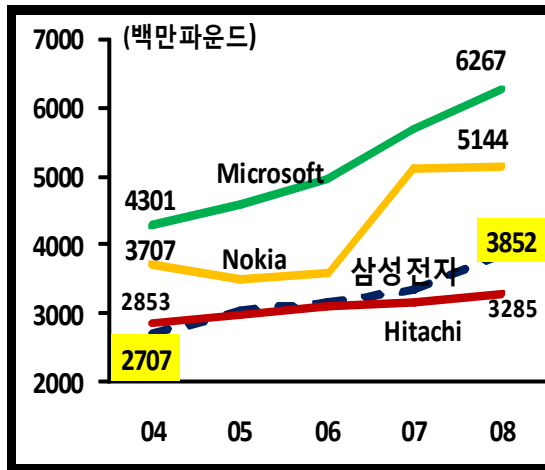
-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총 R&D 투자규모는 2004년 874억 파운드에서 2008년 1,250억 파운드로 연평균 9.35% 증가하였고, 2008년 R&D 집중도는 6.93%에 달함
 - 개별 기업의 R&D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R&D전략을 중시하고 있음을 뜻하며, R&D투자 강화를 통한 생존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반영함
-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현상이 두드러짐
 - 이러한 융합현상을 반영하여 전자부품·장비산업, IT하드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이동통신산업을 통합해 전자정보통신산업으로 규정함

○ (R&D 비교) 한국1등기업(삼성전자)의 R&D 투자규모는 미국1등 기업(Microsoft)의 3/5 수준, EU1등 기업(Nokia)의 3/4 수준이며, 지난 4년간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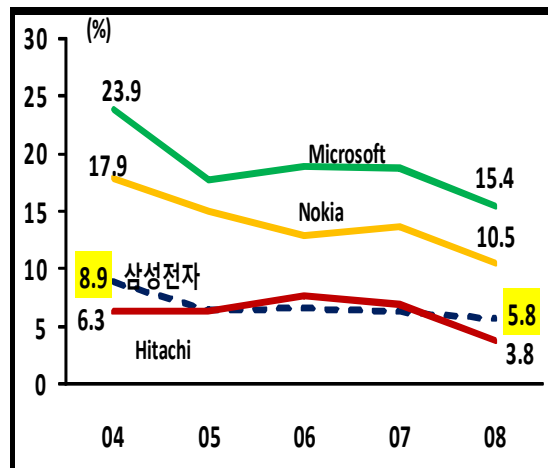
- 2008년 한국1등기업의 R&D투자규모는 38억8,500만 파운드로 미국1등기업의 3/5 수준, EU1등기업의 3/4 수준임
 - 미국1등기업과의 R&D투자규모 격차는 2004년 15억9,400만 파운드에서 2008년 24억1,500만 파운드로 벌어졌으며, EU1등기업과의 격차도 9억9,900만 파운드에서 12억9,300만 파운드로 조금 더 커짐

- 2008년 한국1등기업의 R&D 집중도는 5.75%로 미국1등기업의 15.42%, EU1등기업의 10.49%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 격차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매출액 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R&D 투자규모 추이 >



< R&D 집중도 추이 >



자료 : 영국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의 “The 2009 R&D Scoreboard: 세계 R&D 투자 100대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체 계산

- 주 :
1. 산업분류기준은 Dow Jones 와 FTSE 가 개발한 산업분류기준 Industry Classification Benchmark)임. 단, 전자정보통신산업은 전자부품 장비산업, I하드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이동통신산업을 포함함
 2. 회계연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나라마다 회계연도가 다를 수 있음
 3. 영국 파운드화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달러나 원화로 산출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4. R&D집중도 = (R&D/매출액)*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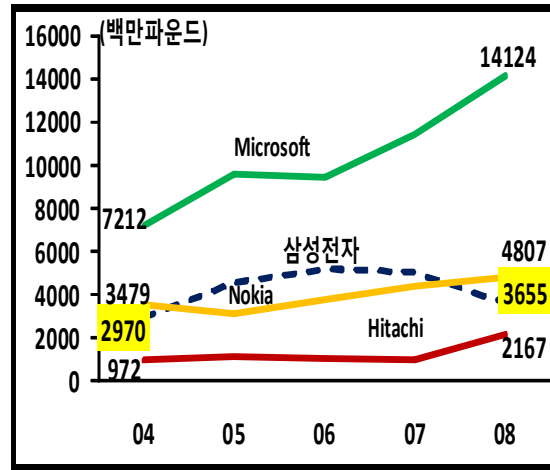
○ (특허비교) 한국1등기업은 미국1등기업에 비해 특허등록 건수에서 앞서나,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지난 5년간 한국1등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는 3,502개로 미국1등기업의 2,026개보다 앞서나, 연평균 특허증가율은 미국1등기업의 34.0%보다 낮은 21.6%임
- EU1등기업의 R&D투자규모는 한국1등기업의 1.3배 수준이지만 특허등록 건수는 1/6 수준에 불과함
- 이와 같은 현상은 산업별 혁신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Microsoft)보다 전자부품·장비산업(삼성전자)에서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최근 소프트웨어산업에서도 특허를 중시하는 흐름을 반영함

< 특허 추이 >

기업명 (국가명)	특허등록 건수		
	2004	2008	5년 합계
삼성전자 (한국)	1,604	3,502	11921
Microsoft (미국)	629	2,026	6501
Hitachi (일본)	1,514	1,301	7199
Nokia (EU)	367	608	2586

< 영업이익의 추이 >



자료 :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Patent by Organizations 2004-2008"

○ (기업성과) 한국1등기업의 영업이익은 미국1등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그 격차가 더욱 커지는 추세임

- 2008년 한국1등기업의 영업이익은 36억5,500만 파운드로 미국1등기업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도 미국1등기업의 18.3%보다 낮은 5.3%임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쟁사인 EU1등기업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냈으나, 2008년에 다시 역전을 허용함

(2) 자동차산업

○ (혁신특성) 과학기술 능력과 인적·조직자본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산업으로서, R&D집약도 및 특허등록 건수가 전자정보통신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철강산업 및 중공업보다는 높은 수준임

- 자동차산업은 과학기술 능력(명시적 지식)과 근로자의 노하우(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임
- 자동차기업은 R&D 투자전략뿐만 아니라 인적·조직자본 강화전략을 기업전략의 중심에 놓음

-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의 자동차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학습 패러다임을 'learning by doing'(암묵적 지식)에서 'learning by research'(명시적 지식)로 확장시킨 데 있음³¹⁾
 - 이는 근로자의 노하우(암묵적 지식)에 공격적 R&D전략을 접목시켜 추격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됨

- 자동차산업의 총 R&D 투자규모는 2004년 694억400만 파운드에서 2008년 550억2,900만 파운드로 연평균 10.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산업의 2008년 R&D 집중도는 4.43%로 전자정보통신산업의 6.93%보다 낮고, 철강산업의 0.80%, 중공업의 2.81%보다는 높음
 - 특허를 통한 기술보호 또한 전자정보통신산업보다 낮으나, 철강산업 및 중공업보다는 활성화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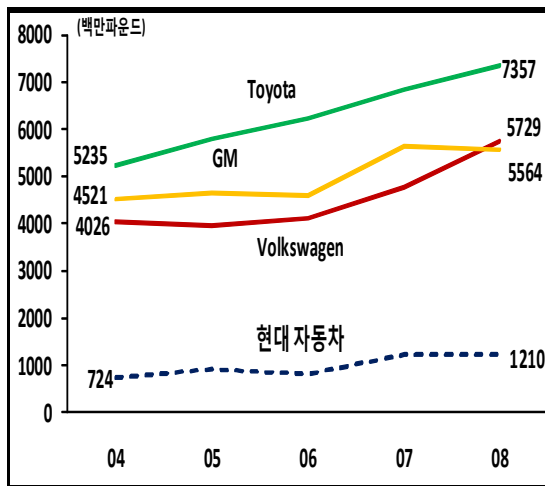
- (R&D 비교) 한국1등기업(현대자동차)의 R&D 투자규모는 일본1등기업(Toyota)의 1/6 수준, 미국1등기업(GM)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임
 - 2008년 한국1등기업의 R&D 투자규모는 12억1,000만 파운드로 일본1등기업의 1/6 수준, 미국1등기업의 1/5 수준에 불과함
 - 특히 한국1등기업은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 R&D 투자규모를 줄임
 - 반면 일본1등기업은 지속적으로 R&D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EU1등기업도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공격적으로 R&D 투자를 늘림

 - 한편 2008년 한국1등기업의 R&D 집중도는 2.75%로서, 선발기업인 GM, Volkswagen, Toyota, Ford의 5.37%, 5.21, 3.65%, 4.99%보다도 낮음
 - 뿐만 아니라 후발기업인 Honda의 4.90%, Daimler의 4.63%, Nissan의 4.23%, BMW의 5.38%, Peugeot의 4.36%, Renault의 6.12%보다 낮아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결국 한국1등기업과 경쟁사의 R&D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 일본1등기업과의 격차는 2004년 45억1,100만 파운드에서 2008년 61억4,800만 파운드로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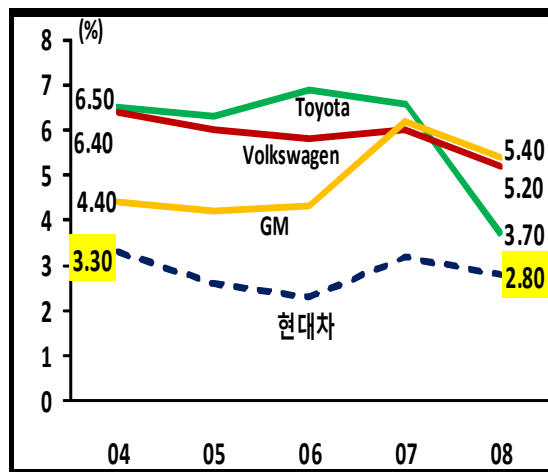
31) Kim, Linsu (1998), "Crisis Construction and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Building in Catching-up at Hyundai Motor", Organization Science, Vol. 9, No.4, 506~521

- 이는 한국1등기업이 경쟁사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R&D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뜻하며, 세계5위의 자리를 수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음을 뜻함
 - 한국1등기업이 아무리 인적·조직자본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과학기술 역량이 지속적으로 뒤처진다면 세계1등기업으로의 도약은 어려울 것임
- 특히 세계경제위기 때 공격적인 R&D전략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임
 - 2008년 202억8,600만 파운드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미국1등기업은 R&D에 55억6,400만 파운드를 투자한 반면, 영업이익 16억9,100만 파운드인 한국1등기업은 12억1,00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데 그침

< R&D 투자규모 추이 >



< R&D 집중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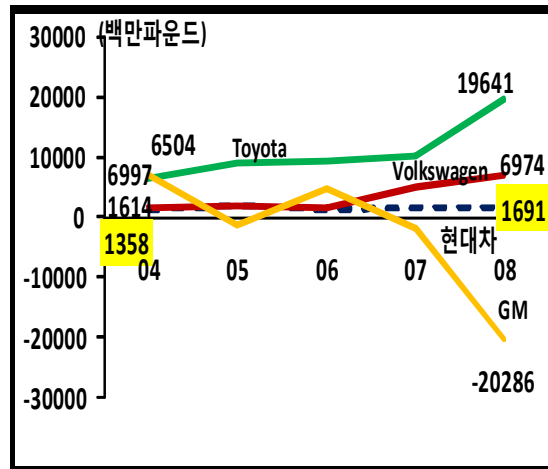
○ (특히 비교) 특허등록 건수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1등기업의 5년간 특허등록 건수는 575건인 반면 일본1등기업은 1,657개, 미국1등기업은 1,795개에 달함
 - 또한 지난 5년간 R&D 투자규모 격차가 확대된 것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특허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특허 추이 >

기업명 (국가명)	특허등록 건수		
	2004	2008	5년합계
현대자동차 (한국)	110	104	575
GM (미국)	376	194	1,795
Toyota (일본)	264	387	1,657
Volkswagen (EU)	-	-	-

< 영업이익 추이 >



주 :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연간 40건 이상의 특허를 등록하는 기업정보를 공개함. Volkswagen은 40건 미만임.

○ (기업성과) 한국1등기업의 영업이익은 일본1등기업이나 EU1등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2008년 한국1등기업의 영업이익은 16억9,100만 파운드로 일본1등기업의 1/11 수준에 불과하며,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도 일본1등기업의 31.8%보다 낮은 5.6%임
- 2008년 R&D 투자규모 면에서 미국1등기업을 앞선 EU1등기업(Volkswagen)의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한 반면, 세계경제위기의 중심에 놓였던 미국1등기업은 2008년 202억8,600만 파운드의 영업손실을 기록함

(3) 철강산업

○ (혁신특성) 타 산업에 비해 인적·조직자본 능력이 중시되고 과학기술능력이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과학기술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전통적 인식과는 달리, 1990년대부터 차세대 혁신철강기술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강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공법이 출현하고 있음

· POSCO가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4위³²⁾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를 기초로 전략적 기술기획, 최고경영진의 기술 리더쉽, 초기 단계의 정부지원 등이 적절히 결합되었기 때문임³³⁾

- 철강산업의 R&D 집중도는 0.80%로서 전자정보통신산업의 6.93%, 자동차산업의 4.43%, 중공업의 2.81%보다 훨씬 낮음
- 여타 산업에 비해 기술변화가 느리고 과학기술능력보다는 인적·조직자본 능력이 중시되는 산업특성을 반영함
- 하지만 철강산업의 총 R&D 투자규모는 2004년 16억8,500만 파운드에서 2008년 26억8,700만 파운드로 연평균 12.4%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R&D 비교) 한국1등기업(POSCO)의 R&D 투자규모는 일본1등기업(Nippon Steel) 및 EU1등기업(Arcelor-Mittal)과 비슷한 수준임

- 한국1등기업의 2008년 R&D 투자규모는 2억7,400만 파운드로 EU1등기업의 2억500만 파운드보다는 크고 일본1등기업의 3억4,800만 파운드보다는 작음
- 하지만 연평균 R&D 증가율은 일본1등기업의 6.5%보다 높은 15.6%로서, 곧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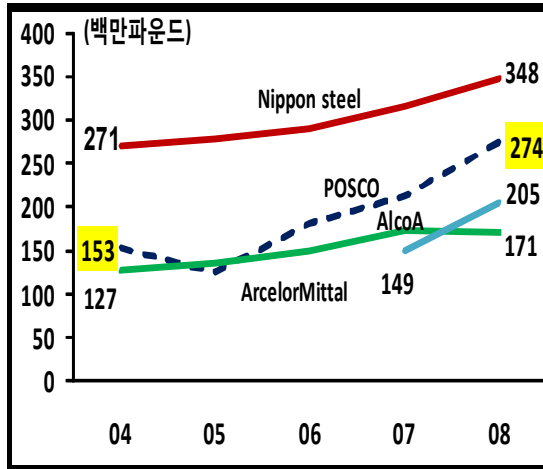
- 한국1등기업은 적극적인 R&D 투자전략으로 일본1등기업과의 R&D 투자규모 격차를 2004년 1억1,800만 파운드에서 2008년 7400만 파운드로 줄임
- 이는 기술변화가 느리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낮은 철강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1등기업이 공격적인 R&D투자전략을 통해 세계1등기업을 바짝 추격할 좋은 사례임

- 3년 내에 한국1등기업의 R&D 투자규모가 일본1등기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1등기업이 R&D 증가율을 연평균 15.7%로 유지하고 일본1등기업이 연평균 6.4%를 유지한다면, 3년 내에 추월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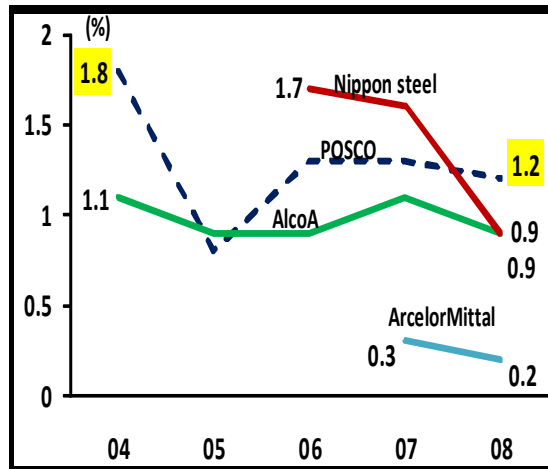
32) 2006년 기준 Arcelor-Mittal Steel, Nippon Steel, JFE Steel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음

33) 이공래 외 (2008), 한국 선도산업의 기술혁신경로 창출능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R&D 투자규모 추이 >



< R&D 집중도 추이 >



- 주: 1. R&D투자액 기준 EU의 1등기업은 ThyssenKrupp(독일)이나, 철강뿐만 아니라 자본재, 서비스업을 겸하고 있어 POSCO와의 비교가 곤란에 무리가 따름. 반면 Arcelor-Mittal은 철강산업 1, 2위를 달리던 Mittal Steel과 Arcelor가 2006년에 합병한 기업으로서, 매출액 규모에서는 ThyssenKrupp을 앞서는 1위임
2. Arcelor-Mittal은 2006년 Mittal Steel과 Arcelor가 합병했기 때문에 2007년부터 표기하였고, Nippon Steel은 데이터 부족으로 2006년부터 표기함

○ (기업성과) 한국1등기업의 영업이익은 38억7,300만 파운드로, EU1등기업의 96억6,500만 파운드, 일본1등기업의 45억3,000만 파운드보다 적음

- 매출액 규모도 EU1등기업의 868억9,400만 파운드, 일본1등기업의 370억3,600만 파운드보다 작은 230억5,100만 파운드임
- R&D 능력 제고를 매출액 증가 및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 짓는 전략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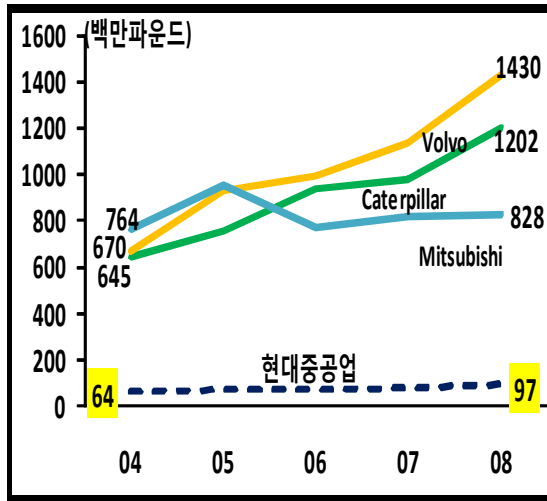
(4) 중공업

○ (혁신특성) 조선(造船)기업들이 비조선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며, 기술경쟁력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R&D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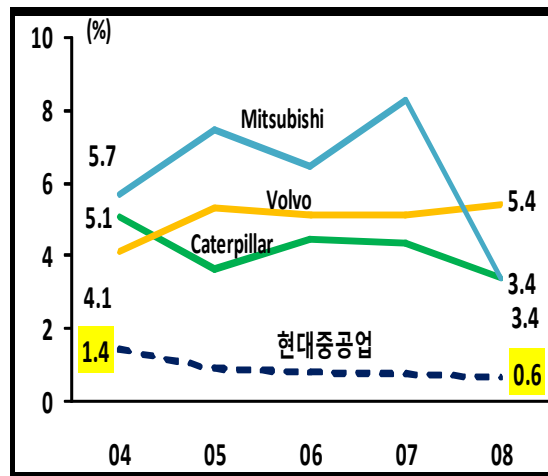
- 한국이 조선업계 1위로 올라선 원동력은 기술경쟁력 향상이었음
- 1999년 이후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조선업계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007년 상위 10개 기업 중 6개가 한국기업임

- 일본에 비해 생산능력과 품질이 다소 열위지만 설계 및 개발능력, 마케팅능력, 기
자재 납기 등의 측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기 때문임
 - 경기변동에 민감한 조선업계의 선두기업들은 최근 해양개발, 플랜트, 엔진, 로봇, 중
기계 등의 비조선 부문을 강화·신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현대중공업도 조선업계 1위를 굳건히 수성하는 가운데, 중공업 1등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조선산업을 포함한 중공업(Industrial Engineering)의 총 R&D 투자규모는 2004
년 66억6,600만 파운드에서 2008년 112억6,000만 파운드로 연평균 14.0%의 높
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R&D 집중도는 281%로서, 철강산업보다 높고 전자정보통신산업이나 자동차산업보
다 낮음
- (R&D 비교) 한국1등기업(현대중공업)과 미국1등기업(Volvo), 미국1등기업
(Caterpillar)과의 R&D 투자규모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일본1등기업
(Mitsubishi 중공업)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 한국1등기업의 2008년 R&D 투자규모는 9,700만 파운드로 EU1등기업의 14억
3,000만 파운드, 미국1등기업의 12억200만 파운드보다 훨씬 작으며, R&D 성
장률도 EU1등기업의 20.1%, 미국1등기업의 16.8%보다 낮은 10.9%에 불과함
 - 한편 현대중공업처럼 조선업으로 시작한 일본1등기업의 R&D 투자규모는 8
억2,800만 파운드로 한국1등기업보다 8.5배나 큼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1등기업의 R&D 집중도는 항상 경쟁사보다 낮음
 - 한국1등기업의 2008년 R&D 집중도는 0.64%로서 EU1등기업의 5.35%, 미국1
등기업의 3.37%보다 낮으며, 일본1등기업의 3.37%에 비해서도 크게 뒤짐
 - 한국1등기업과 세계1등기업의 R&D 투자규모 격차는 기술경쟁력 격차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음

< R&D 투자규모 추이 >



< R&D 집중도 추이 >



- (기업성과) 한국1등기업의 2008년 영업이익은 16억8,400만 파운드로 미국1등기업의 31억4,900만 파운드보다는 작으나, EU1등기업의 13억200만 파운드, 일본1등기업의 7억9,100만 파운드보다 높은 수준임
- 한국에 밀려 조선업에서 비조선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일본1등기업의 경우, 높은 R&D투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음
- 한국1등기업의 경우 효자종목인 조선업에서의 1위를 굳건히 수성하면서 비조선업으로의 확장을 피할 필요가 있음

3. 세계1등국가 추격을 위한 정책과제

- (개관) 한국의 산업별 1등기업의 혁신능력이 미국, EU, 일본의 1등기업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만큼,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 혁신능력 강화 전략을 수립, 집행해야 함
- (기업차원) 한국의 산업별 1등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R&D 전략을 수립,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기술변화가 빠른 전자정보통신산업에서 한국1등기업이 세계1등기업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격적인 R&D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한국1등기업이 R&D집중도를 현재의 4.75%에서 EU1등기업 수준(10.49%)까지 높인다면 빠른 시일 내에 EU1등기업을 추월하고 미국1등기업을 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연평균 R&D 증가율을 현재의 9.2%에서 15%까지 높일 경우, 매년 8.5%씩 R&D투자를 늘리는 EU1등기업을 5년 내에 추월할 수 있음

- 자동차산업 한국1등기업이 세계1등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R&D 집중도를 현재의 2.75%에서 업계 평균인 4.4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본1등기업의 1/6 수준에 불과한 R&D투자규모를 높여야 함

- 중공업 한국1등기업도 R&D 집중도를 현재의 0.64%에서 경쟁사인 일본1등기업의 3.37%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철강산업 한국1등기업은 지금의 공격적인 R&D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음

- R&D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을 중시하는 혁신문화를 형성하며, 근로자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해야 함

- 기업의 혁신능력은 과학기술 능력만으로 치환되지는 않으며,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혁신활동에 참여하도록 인적자본과 조직자본을 재구성해야 함
- 이를 위해 기술을 중시하는 혁신문화 형성,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요구됨

- 한국1등기업의 성공 이면에는 경영자의 과감한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
- 자동차산업 한국1등기업의 경영자는 ‘값싸고 품질이 적절한 차’에서 ‘제값을 받고 품질이 최고인 차’로 이미지를 바꾸는 품질경영을 제시하고, 국산엔진 개발, ‘10년 10만마일 파워트레인 보증’ 등의 배수진을 쳤으며, 여기에 목표를 향해 돌파하는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었음
- 철강산업 한국1등기업의 경영자는 2020년대를 대비한 독자적 신기술 개발, 즉 용융환원 프로젝트와 스트립캐스팅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으며, 노사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전자정보통신산업과 중공업의 한국1등기업 또한 마찬가지임

○ (정부차원) R&D투자 관련 세액공제 비율을 10~15%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R&D 관련 세액공제 비율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
 - 현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은 3~5%이고 중소기업은 25%임
 - 반면 일본은 10~15%, 프랑스는 10%, 영국은 8.4%, 중국은 12.5% 수준임
 - 경쟁국과의 세액공제 비율 격차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공격적인 R&D 전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한 세계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중견기업이 공격적인 R&D 투자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비율을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인 10~1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세제지원 외에도 정부R&D지원, R&D 인프라구축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부정책이 시급히 요구됨

- 기술변화가 빠른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경우, R&D 관련 세제지원(세액공제)과 더불어 정부R&D투자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소프트웨어, 비메모리반도체 등 세계1등기업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 R&D투자 및 근로자의 노하우가 중시되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R&D 관련 세제지원, 정부재정지원과 더불어 회사 내부적으로 인적역량·조직역량을 강화시키는 종합대책이 필요함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정민 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외국인투자 부진과 활성화 과제

1. 외국인직접투자(FDI)³⁴⁾의 부진 현황과 특징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0년을 정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절대적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GDP대비 비중도 추세적으로 하락

-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152.5억불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여 2009년도에는 114.8억불을 기록
- 외환위기 직후 급증했던 투자자금이 2003년까지 빠져나간 후 정체 상태

< 외국인직접투자 연도별 투자실적 (신고기준) >



자료: 지식경제부

- 외국인투자의 GDP대비 비중도 '00년 1.8% 이후 하락하여 '09년 0.7%를 기록했고 독일, 중국, 영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바 **FDI 활성화 노력이 필요**
-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FDI 증가율³⁵⁾은 일본 6%, 프랑스 10%, 이태리 21%였으나, 우리나라는 2007년 2만불 도달 이후 FDI 증가율이 4.8%로 낮고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음

34) 외국인직접투자(FDI)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단기 주식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출자한 내국법인에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 등이 있음. (자료: <http://www.investkorea.org>)

35) 예상한이만용,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2008.12.16

○(제조업 비중 크게 하락) 산업별 외국인투자(FDI) 추이를 보면, 제조업에 유입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여 2009년도에 32.4%에 불과하며, 서비스업의 투자와 상대적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66.1%를 기록³⁶⁾함

-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60%내외에서 움직이면서 점차 증가하고, 제조업은 30%내외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10년간 서비스업의 평균 비중은 그 이전 10년 평균에 비해 19%p가량 증가했으며, 반대로 제조업은 20%p가량 크게 감소함
- 최근 10년간 서비스업의 FDI 건수 합계는 2만5천여 건으로 1990년대에 비해 5.5배 증가했으며, FDI 금액도 3.8배 급증함

< 외국인직접투자의 연도별·산업별 비중 추이 >

(단위: 건, 백만 달러,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2000	832	6,877	45.1	3,259	8,121	53.2	54	259	1.7
2003	588	1,699	26.3	1,921	4,132	63.9	60	639	9.9
2006	713	4,253	37.8	2,339	6,626	58.9	55	368	3.3
2009	544	3,725	32.4	2,528	7,594	66.1	59	165	1.4
2000~2009 (A)	6,668	36,797	33.0	25,486	69,285	62.2	605	5,357	4.8
1990~1999 (B)	4,120	22,294	53.1	4,603	18,300	43.6	225	1,409	3.3
(A-B)	(2,546)	(14,497)	(-20.1)	(20,880)	(50,973)	(18.6)	(380)	(3,949)	(1.5)

자료: 지식경제부

주: 신고기준이며, 기타는 1차 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포함. 비중은 금액 기준

- (일본보다 제조업 비중 낮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진입한 우리의 2007년과 일본의 1988년 FDI의 산업별 비중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제조업이 25.6%로 크게 하락했으나, 일본은 제조업이 74.7%로서 높은 비중을 유지

< 한·일의 1인당 소득 2만 달러 진입시점의 산업별 FDI 구성 >

(단위 : %)

	한국(2007년)*	일본(1988년)**	일본(2007년)
제조업	25.6	74.7	6.2
서비스업	72.4	23.8	93.8

자료: 예상한·이만용,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2008.12.16

36) 2010년 2/4분기 제조업의 총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 서비스업은 52.6%

○ **업종별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비중 추이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화공, 운송용기계 등 세 업종에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짐**

-**(3개 제조업종에 편중)** 제조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전기전자, 운송용기계, 화공 3개 분야 비중이 평균 68.1%로서 1990년대 평균 56.7%보다 더 높아짐
·감소하고 있는 의약, 식품, 기계장비 분야의 FDI 비중을 다시 제고해야 함

< 제조업 업종별 외국인투자 추이 >

(단위: 건, 백만불, %)

	1990~1999 누계			2000~2009 누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제조업	4,120	22,294	100.0	6,668	36,797	100.0
식품	435	2,642	11.8	272	1,513	4.1
섬유·직물·의류	478	546	1.1	260	779	2.1
제지·목재	145	2,199	10.1	98	378	1.0
화공	1,158	4,340	19.1	766	5,827	15.8
의약	273	728	2.0	130	484	1.3
비금속광물	233	2,113	4.7	209	2,033	5.5
금속	414	869	4.7	438	2,236	6.1
기계·장비	1,426	2,389	7.5	915	3,658	9.9
전기·전자	1,816	6,839	29.5	2,299	13,905	37.8
운송용기계	466	2,498	8.1	842	5,341	14.5
기타제조	661	662	1.4	439	640	1.7

자료: 지식경제부

-**(다양화된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10년간 금융보험업 비중이 35.6%에 달하며,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은 각각 10.2%와 11.5%로 증가
·반면, 유통시장개방으로 '90년대 46.2%를 차지했던 유통업의 비중은 18.0%로 급락했으며, 음식숙박업도 '90년대 11.4%에서 최근 10년 평균 5.8%로 급감

< 서비스업 업종별 외국인투자 추이 >

(단위: 건, 백만불, %)

	1990~1999 누계			2000~2009 누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서비스업	4,603	18,300	100.0	25,486	69,285	100.0
도·소매(유통)	3,024	8,457	46.2	16,372	12,465	18.0
음식·숙박	212	2,082	11.4	1,264	4,041	5.8
운수·창고(물류)	223	477	2.6	831	3,671	5.3
금융·보험	299	4,562	24.9	1,530	24,682	35.6
부동산·임대	63	343	1.9	878	7,042	10.2
사업서비스	597	1,090	6.0	3,388	7,984	11.5
기타서비스	185	1,290	7.0	1,223	9,400	13.6

자료: 지식경제부

· 금융·보험업종에 편중된 서비스업 FDI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관광 등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

○(FDI 투자국 다양화) 지역별로 FDI의 추이를 보면, 최근 10년간 미주지역의 비중은 줄어들고, 구주 및 아주지역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 전통적인 FDI 주도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 영국 캐나다 등 신흥투자국들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라이베리아, 바하마,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FDI의 비중은 '90년대 0.6%에서 2000년대 1.5%로 크게 높아짐

< 외국인직접투자 지역별 투자실적 >

(단위: 건,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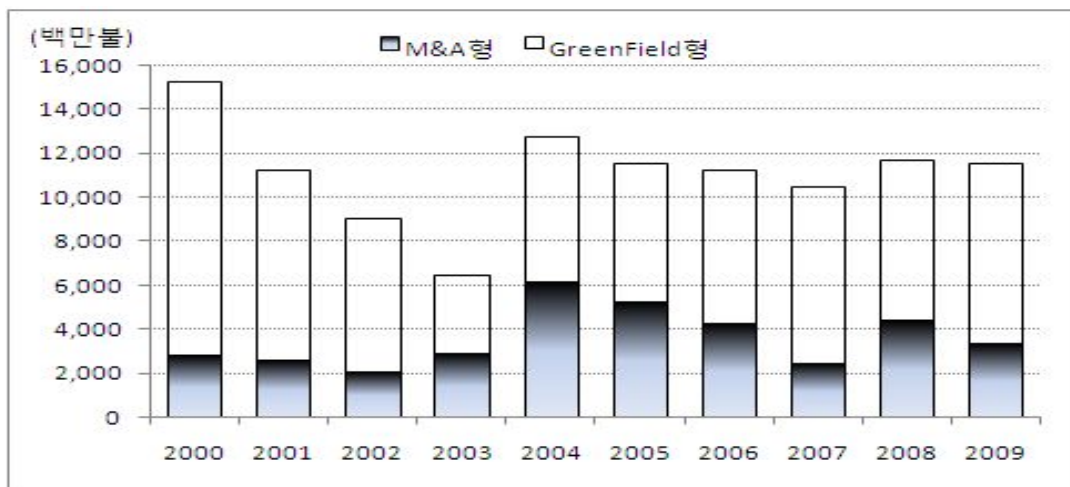
	1990~1999년 누계			2000~2009년 누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국제기구	34	129	0.3	4	34	0.0
미주지역	2,802	14,757	35.1	6,748	35,942	32.3
미국	2,493	13,084	31.1	5,276	26,799	24.0
캐나다	125	625	1.5	441	3,302	3.0
버뮤다	41	107	0.3	112	1,634	1.5
케이만군도	20	685	1.6	346	2,896	2.6
아주지역	4,219	11,587	27.6	19,422	31,865	28.6
일본	2,498	4,550	10.8	5,239	15,778	14.2
싱가포르	199	1,810	4.3	783	4,061	3.6
홍콩	254	1,011	2.4	786	2,802	2.5
말레이시아	192	3,674	8.7	534	3,371	3.0
중국	682	73	0.2	5,832	2,600	2.3
대만	116	124	0.3	343	805	0.7
구주지역	2,023	15,350	36.5	4,515	42,357	38.0
독일	449	2,629	6.3	861	6,110	5.5
영국	284	1,148	2.7	729	8,720	7.8
프랑스	252	1,833	4.4	482	3,828	3.4
벨기에	29	520	1.2	139	2,768	2.5
네덜란드	370	6,728	16.0	684	11,953	10.7
아일랜드	81	1,130	2.7	141	1,126	1.0
조세회피지역	138	239	0.6	566	1,674	1.5
전 체	8,948	42,004	100.0	32,759	111,438	100.0

주: 신고기준임.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은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라이베리아, 파나마, 바하마 등

○(그린필드형의 복권) 형태별로 보면, 그린필드형 FDI의 비중이 '04년 52% 까지 감소했으나, '05년이후 다시 증가하여 '09년에는 71%까지 높아짐

- '01년부터 '04년까지 그린필드형 투자 비중이 계속 감소했으나, '0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09년에는 71%까지 높아짐
- M&A형 외국인투자의 경우, '04년에 48%까지 그 비중이 증가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9년에는 29%까지 떨어짐
-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M&A형 투자의 비중이 60% 이상³⁷⁾인 바, 우리도 향후 M&A형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도약하기까지는 제조업 분야 그린필드형 FDI의 지속적 유입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
- 현재 경제 상태에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개선과 리모델링, 바이오 나노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 필요

< 성격별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자료: 지식경제부

< 성격별 연대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그린필드형	M&A형
1990년대 평균	73.9	26.1
2000년대 평균	67.2	32.8

자료: 지식경제부

37) 장윤중(2008),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04호(2008-30), 2008.6.23, p.9

○(증액투자 증가) 투자시점별 비중을 보면, 신규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 비해, 기존 투자기업들의 증액투자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

- 2005년 이후 증액투자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2009년에는 57.4%를 기록함
- 2000년 이후 10년 평균을 보면 신규투자가 42.8%, 증액투자가 52.5%, 장기차관이 4.7%로서 증액투자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FDI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과 관련된 M&A투자나 기존 사업의 증액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FDI의 증가율을 年1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자를 발굴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함

< 외국인직접투자 시점별 투자실적 >

(단위: 백만불, %)

연도	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2000	5,463	35.8	9,493	61.9	354	2.3	15,256
2001	6,346	56.2	4,331	38.4	610	5.4	11,287
2002	5,678	62.4	3,221	35.4	196	2.2	9,095
2003	2,455	37.9	3,936	60.8	80	1.2	6,471
2004	6,200	48.5	5,556	43.4	1,039	8.1	12,796
2005	3,758	32.5	7,716	66.7	92	0.8	11,566
2006	4,341	38.6	6,515	57.9	391	3.5	11,247
2007	5,055	48.1	4,919	46.8	541	5.1	10,515
2008	4,421	37.8	6,263	53.5	1,027	8.8	11,711
2009	4,018	35.0	6,590	57.4	876	7.6	11,484
'00~'09 합계	47,735	42.8	58,540	52.5	5,206	4.7	111,428

주: 신고기준임

○ 투자금액의 규모별로 분류해 보면, 1억불 이상 대형투자의 비중이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만불에서 1억불 미만의 중형투자가 30%내외, 1천만불 이하의 소형 투자가 10%내외를 점유하고 있음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과 침체를 겪었던 '99년, 2000년과 2009년에 1억불 이상 대형 투자의 비중이 각각 64.5%, 60.4%, 60.6%로서 평균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 특징적임

2.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 그리고 오만과 편견

○ (잠재력에 미달하는 성과) FDI의 유치 잠재력³⁸⁾은 높는데 유치 성과는 부진

- UN 무역개발회의(UNCTAD)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는 외국인투자의 유치 잠재력은 비교적 높은 편인데 유치 성과는 낮아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잠재력 이하' 그룹으로 분류됨
- 홍콩과 싱가포르, 영국, 말레이시아 등은 '선도그룹'으로서 잠재력도 높고, 성과도 높은 나라들
-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은 '잠재력 이상' 그룹으로서 잠재력은 비교적 낮지만, 유치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
-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미국 등은 '잠재력 이하' 그룹에 속함

< FDI 유치 성과와 잠재력에 따른 국가그룹 구분 >

높음	(Below Potential)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 대만 미국, 프랑스, 브라질,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Front-Runners) 벨기에, 홍콩, 싱가포르, 헝가리 영국, 말레이시아, 아이슬란드, 칠레 몽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태국, UAE
FDI 유치 잠재력	인도,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카메룬 콩고, 남아공, 에쿠아도르,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가나,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이집트, 온두라스, 자메이카, 페루 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우루과이 잠비아, 아르메니아
낮음	(Under-Performers)	(Above Potential)
	낮음	높음

자료: UNCTAD (www.unctad.org), 'World Investment Report 2008', p.13

주: 1. 2006년도 기준

2. '선도그룹'(Front-Runners)은 FDI 유치 잠재력과 성과가 모두 우수한 그룹, '역량이하 그룹'(Below Potential)은 잠재력은 좋은 편인데 성과가 미흡한 그룹, '역량이상 그룹'(Above Potential)은 잠재력은 우수한 편이 아니지만 성과는 우수한 그룹, '하위그룹'(Under-Performers)은 잠재력도 낮고 성과도 낮은 그룹

38) UNCTAD에서 발표하는 FDI 유치 잠재력지수는 1인당 GDP, GDP 성장률, 수출비중, IT인프라, 에너지사용량, R&D지출, 대학생비중, 국가위험도 등 12개 하부지표를 통해 산출되며, FDI 유치 성과지수는 세계 전체의 FDI 유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 국민소득과 성장률, IT인프라 등으로 평가하는 FDI 유치 잠재력지수는 2000년 16위에서 2008년 16위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FDI 유치 성과지수는 2000년 92위에서 2008년 123위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국민소득 1만7천 달러의 중진국에 속하는 우리로서는 FDI 규모와 증가율을 더 높여서 '선도그룹'으로 도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우리나라의 FDI 유치 잠재력 대비 성과 추이 >

그룹	국가	FDI 유치 성과 지수 (순위)			FDI 유치 잠재력 지수 (순위)		
		2000년	2005년	2008년	2000년	2005년	2008년
선도그룹 (front-runners)	홍콩	1	5	2	13	10	5
	칠레	31	35	27	46	50	53
	헝가리	36	28	1	41	41	40
	영국	23	23	78	5	3	8
잠재력 이하 (below-potential)	한국	92	123	123	16	15	16
	중국	62	68	94	49	36	30
	일본	130	134	129	12	24	25
	독일	9	103	127	10	9	3
	미국	67	122	99	1	1	1
잠재력 이상 (above-potential)	페루	94	66	53	76	91	82
	베트남	53	57	29	77	79	75
하위그룹 (under-performers)	인도	117	120	82	92	84	84
	남아공	118	79	80	72	66	72

자료: UNCTAD (www.unctad.org)

○(지원금 증가, 성과 부족) 외국인투자의 유치지원금은 증가하는데 성과는 감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2001년 2,956억 원에서 2007년 4,755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152.5억 달러에서 2009년 114.8억 달러로 감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대부분은 조세감면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FDI) 유치 지원금 추이 >

(단위: 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조세감면액	2,415	2,010	1,798	3,490	5,446	3,945	3,919
부지매입비	545	671	559	328	655	742	742
현금지원 등	-	-	-	-	-	45	94
합 계	2,956	2,681	2,357	3,818	6,101	4,732	4,755

자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부자료 (김준동 외(2009)에서 재인용)

○(경자유역 증가, 성과 부진) 외국인투자용 경제자유구역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FDI의 유치는 여전히 부진 상태에서 못 벗어남

- 2003년 이후 설치된 인천, 부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 해외직접투자(FDI)가 국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조성된 6개의 경제자유구역³⁹⁾에 2004년부터 2010년3월까지 유치된 FDI는 우리나라 전체의 3.3% 수준에 불과함
- 2004년부터 2009년7월말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도착한 외국인투자(FDI) 규모는 같은 기간의 외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 총액의 14%⁴⁰⁾에 그침

<전체 FDI 중 경제자유구역의 FDI가 차지하는 비중>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군산	황해	대구경북	총계
2004년	-	0.40	0.50	-	-	-	0.89
2005년	0.87	1.99	2.39	-	-	-	5.25
2006년	0.46	0.38	0.18	-	-	-	1.02
2007년	1.12	0.89	0.92	-	-	-	2.92
2008년	1.09	0.95	0.02	-	-	-	2.06
2009년	2.69	0.37	0.02	1.88	-	-	4.97
2010년*	9.44	5.73	0.09	9.74	-	-	25.0
총계	1.20	0.93	0.65	0.52	-	-	3.30

자료: 지식경제부 내부 자료

주: 2010년 자료는 2010년3월말 기준 자료임

- 아래 표와 같이, 6개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이 다수 겹치기 때문에 지역별 특장점을 살린 차별화 전략이 쉽지 않음

<경제자유구역 개요 및 중점 유치 업종>

명칭	위치	지정	완료	면적	중점 유치 업종
인천	인천	'03년	'20년	209km ²	비즈니스, IT·BT, 국제금융, 레저
부산·진해	부산·경남	'03년	'20년	104km ²	해운물류, 자동차, 기계, 조선
광양만권	전남·경남	'03년	'20년	90km ²	해운물류, 소재산업
황해	경기·충남	'08년	'25년	55km ²	자동차부품, IT·BT, 부가가치 물류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08년	'20년	39km ²	교육, 의료, 패션, IT, 부품·소재
새만금·군산	전북	'08년	'30년	66km ²	자동차, 조선, 부품소재, 친환경 산업

자료: 기획재정부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2008.05.23.

3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40)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총 103억7천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도착한 투자(FDI) 금액은 15억 달러(14%)에 불과 (감사원,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2009.12)

○(FDI의 오만: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권리는 철저하게 요구하지만,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불평등 계약의 사례들이 다수 존재함⁴¹⁾

- 지난 10년 동안 하락 추세에 있는 외국인투자(FDI)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제도적 실패⁴²⁾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FDI와 관련된 몇 가지 ‘오만과 편견’의 해소 및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사례1: A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B외투기업은 2008년말까지 준공기로 한 상업업무용시설 53.8만㎡(약16만평)를 착공만하고 진행을 미루고 있으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에만 주력. 2008년 말까지의 목표 가운데 1.6%에 불과한 3,350만 달러(약370억 원)만 FDI로 유치한 채, 사업비의 대부분인 1조 9,259억 원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차입
 - 문제점: A구역 광역자치단체의 의무는 명확하고 그 의무에 대한 이행강제 조항도 명백한 반면, B외투기업은 자의적으로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는 등 불평등계약에 따라 계약해지와 위약금 청구를 못하고 있음
- 사례2: C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이 부진한 23.4만㎡(약7만평)을 D도시공사가 E외투기업으로부터 약5,000억 원(3.3㎡당 706만원)에 재매입할 것을 추진
 - 문제점: 당초 E외투기업에 공급한 가격은 약 850억 원(3.3㎡당 120만원)에 불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FDI 유치목표도 못 채우고 있는 E외투기업에게 불로소득 4천억 원을 안겨주는 거래를 추진하다 2009년 말 감사원에 적발
- 사례3: 2009년 말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0년4월30일 다시 체결한 변경계약서에는 ‘의무 未이행時 벌칙부과 규정’을 추가했으나, 그 의무의 전제 조건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있는 의무규정인지 의심되며, 외자유치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B외투기업의 외자유치 의무를 가볍게 해줌

○(FDI에 대한 편견) 외국인투자(FDI)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4가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며, 향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함

41) 불평등계약의 사례1, 사례2는 감사원(2009.12) 자료를 참조

42) 제도가 선진화되어야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제도가 잘 설계되어 있었던 나라들이 빈곤에서 탈피하고 경제성장에 성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음 (김승욱, ‘경제성장의 실패는 제도의 실패다’, 한국경제연구원 칼럼, 2010.8.25)

- **편견1: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익률이 높고 연구개발도 활발할 것이라는 편견**
 - 수익성이 좋고 배당도 많이 하지만, R&D 집약도는 높지 않음
 - 전반적으로 2008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서 R&D집약도를 포함한 R&D 활동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⁴³⁾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수익률, 배당, 연구개발투자 비교 >

(%)

구분		2003	2005	2008
매출액 영업이익률	외국인투자기업	6.9	6.2	5.6
	국내기업	6.9	5.7	5.0
배당성향	외국인투자기업	33.0	40.2	35.6
	국내기업	19.2	19.0	17.8
R&D 집약도	외국인투자기업	1.26	1.6	0.84
	국내기업	1.56	1.1	1.71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각 년도

주: 1.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R&D집약도 = (연구개발비/매출액)*100.

배당성향 = (배당액/당기순이익)*100.

2. 2003년은 제조업 기준. 2005년과 2008년의 경우, R&D집약도는 제조업 기준.

- **편견2: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이전을 활발히 할 것이라는 편견**
 - 2003년도에 전산업을 대상으로 969개 외투기업의 R&D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관련기업에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기술이전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은 75개사, 조사대상의 7.7%에 불과⁴⁴⁾
- **편견3: 투자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면 투자 유치도 많아질 것이라는 편견**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금액의 FDI 순유입액 대비 비중은 9%로 아일랜드의 0.9%에 비해 10배 가량 높아 상당히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와 아일랜드의 투자인센티브 금액 대비 투자유입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한국	아일랜드
FDI 순유입액	4,950	12,811
인센티브 지급금액	453	115
인센티브지급/FDI 순유입액	9%	0.89%
인센티브 유형	조세감면 위주 / 국내외기업 세율 차등	현금지원 위주 / 국내외기업 차별화 없음

자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부 자료 (김준동 외(2009)에서 재인용)

주: 투자금액 및 인센티브금액은 2006년 기준

43)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분석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R&D 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44) 김기국(2003.11),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현황 및 과제', STEPI, p.17

- **편견4: 외국인투자기업은 특혜와 조세감면을 원할 것이라는 편견**
-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분야라고 제시한 항목은 '노사관계'였고 '조세부담 완화'는 4번째 응답률을 보임

< 향후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

(%)

구분	2006	2007	2008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34.6	38.3	26.7
국민의식 국제화	31.1	38.7	26.7
시장개방 확대	22.5	35.2	24.6
조세부담 완화	13.2	13.8	19.2
외국어사용 보편화	13.2	13.8	16.7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확보	12.9	13.0	12.8
보다 자유화된 국제금융환경 조성	10.7	12.3	11.0
정치적 안정	8.9	8.7	7.8
정부 행정지원서비스 강화	12.1	5.1	7.8
물류환경 정비	6.1	6.3	7.5
정부의 R&D지원 강화	0.0	0.0	6.0

자료: KOTRA(2008), 2008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KOTRA자료 08-025

주: 복수응답 가능. 랜덤샘플링을 통해 280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3.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과제: 한국형 FDI 모델과 경자구역 리모델링 필요

○(한국형 FDI 모델) 기존의 FDI 활성화 논의는 서비스업종, M&A형 투자, 증액투자가 중심이 되는 선진국형 FDI로 전환⁴⁵⁾할 것을 주문했으나, 우리의 2009년 1인당 소득은 1만7천불 수준의 중진국에 불과함

- 잠재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고 있는 국민소득 1만7천불 수준의 중진국으로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고 새로운 투자자를 더 유치하여 FDI 증가율을 현재의 4.5%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FDI 유치 잠재력에 못미치는 성과를 보이는 '잠재력 이하 그룹'에서 벗어나 FDI 잠재력도 높고 성과도 좋은 '선도그룹'으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선진국형 FDI는 주로 서비스업종에 M&A형 투자, 증액투자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그린필드(GreenField)형 신규 투자가 더 활성화되어야 함

45) 김준동 외(2009), 문휘창(2009) 등

한국형 FDI 모델

- ① 제조업종 FDI 활성화, ② GreenField형 FDI 활성화
- ③ 신규투자 활성화, ④ 투자국가 다변화, ⑤ 지역별 특화업종 유치
- ⑥ 국내기업 차별 철폐

- (국내기업 차별 철폐) 백화점식·저인망식 투자유치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산업발전 단계와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맞는 투자자를 유치하며,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등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우리나라 내수시장, 산업구조와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종과 투자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략적으로 유치⁴⁶⁾함
 - 백화점식 인센티브가 아니라 ‘업종별 차별화’를 유인할 수 있는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규제완화와 투자환경의 개선⁴⁷⁾이 지속적으로 필요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을 차별하는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회원국은 없으며⁴⁸⁾, 내외국기업에 대해서 동등하게 현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한도액을 설정하고,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⁴⁹⁾을 준비하고 있음
- (투자업종의 선택과 집중) 위와 같은 새로운 접근과 모델, FDI의 구조변화 등을 감안하여, 우리 산업발전 단계와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맞는 외국인 투자업종과 기업을 아래와 같이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46) 싱가포르와 중국은 이미 자국 경제의 발전단계에 맞는 전략적 업종과 투자자를 선별하여 유인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바 있음(인베스트코리아,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방향』, 2006)

47) 투자유치 선진국들(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세제감면 또는 특혜제도 등의 인센티브 운영 보다는 발달된 인프라, 우수한 노동력, 유리한 세제, 편리한 세관, 우수한 금융시스템 등 투자환경 자체가 유인으로 작용

48) 김준동 외(2009), p.194

49)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예를 들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정부는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금액을 투자금액의 50%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또는 70%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이내로 제한하되, 대신 고용중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지원(투자금액의 20%이내)하는 2011년도 세계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첨단기술(High-End) 및 연구개발 업종
-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 기후변화협약과 탄소배출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업종
-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싱가포르 'Industry 21' (투자유치정책 비전)

- 지식집약형 경제구조 확립에 기여할 9개 전략적 투자유치분야 선정

- ① 전자공학 ② 석유화학 ③ 생명과학 ④ 엔지니어링 ⑤ 교육서비스
- ⑥ 의료서비스 ⑦ 물류 ⑧ 정보통신미디어 ⑨ 지역본부

· 9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

O(제도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이 하락 또는 정체하고 있는 바, 세부 기준을 보면 '하드웨어'와 기초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데 비해 제도와 정책의 예측가능성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많이 뒤쳐져 있음

- 공항, 항만, 도로, 산업단지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나,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노동과 금융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하므로, FDI 관련 제도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함
 - 경영에 꼭 필요한 접대비나 기타 비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선진 각국의 운용사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직원을 위한 기숙사나 사택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우리도 갖고 있지만, 도심에 있는 기숙사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개선이 필요

<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세부 순위 >

연도	전체 순위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교육 및 고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 시장 효율성	노동 시장 효율성	금융 시장 성숙도	기술 수용 적극성	시장 규모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 혁신
'07	11	26	16	8	27	6	16	24	27	7	11	9	8
'10	22	62	18	6	21	15	38	78	83	19	11	24	12

-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도는 '95년 50위에서 2007년 32위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사관계 안정화, 의료 교육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 국민 의식의 세계화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

< 국가별 경제적 자유도 비교 >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아일랜드	8.17 (5위)	8.13 (8위)	8.09 (6위)	7.98 (7위)
영국	8.07 (6위)	8.25 (6위)	8.10 (5위)	7.89 (9위)
대만	7.25 (22위)	7.28 (26위)	7.68 (15위)	7.62 (16위)
독일	7.52 (14위)	7.50 (15위)	7.65 (18위)	7.50 (27위)
일본	7.03 (28위)	7.43 (17위)	7.54 (22위)	7.46 (30위)
한국	6.33 (50위)	6.58 (54위)	7.28 (38위)	7.45 (32위)

자료: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9

○(경제자유구역의 리모델링)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규제완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재량권 강화 등 리모델링이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청의 재량권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와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지정한 만큼 그에 맞는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
 - 예를 들어 아파트, 상업시설 등 부동산개발에서 벗어나, 외국인 정주기능의 핵심인 외국인학교, 외국대학, 외국병원 등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임
 - 수천억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 능력에 맞게 처우할 수 있는 재량권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부여
- 6개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모델의 구축이 필요
 - 6개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이 다수 겹치기 때문에 차별화가 쉽지 않은 바, 지역별 특장점을 살린 선택과 집중, 특성화 전략이 필요
 - 예를 들면, 지식서비스산업형(인천), IT바이오 등 첨단산업형(대구-경북), 물류인프라의 장점을 살린 물류허브형(부산, 광양), 친환경·농업·에너지산업에 기반한 녹색성장형(새만금-군산) 등과 같이 차별화된 모델로 개발

김 동 열 연구위원(2072-6213, dykim@hri.co.kr)

최근 기상이변의 파급영향 및 과제

1. 최근 기상이변⁵⁰⁾ 현상과 원인

○ (기상이변 현상) 최근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가 확대되며 일상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됨

- 폭설과 이상 한파, 폭염과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 등 2010년 들어 한반도에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일상화되고 있음
- 9월21일의 강수량은 서울 강서구 291mm, 강남구 284mm, 하남시 263mm, 부천시 237mm 등으로 9월 하순 강수량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
-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많아 시간당 강수량 30mm이상인 날은 2.2일로 관측 이래 세 번째 많았으며 8월 강수일수도 18.7일로 관측 이래 최고치였음
- 6~8월 평균기온은 24.8℃로 관측 이래 최고치 2위였으며 폭염과 열대야일수는 10.5일, 12.4일로 평년보다 각각 2.3일, 7.0일 더 많았음
- 3~4월에는 이상 저온현상이 발생, 일조시간은 247.1시간으로 평년(338.1시간)의 약 73% 수준이었으며, 최고기온의 평균치가 예년보다 1.6도 낮았음
- 1월 첫 주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과 함께 한파가 발생, 4일 하루 동안 서울에 내린 25.8cm의 눈은 1937년 적설 관측 이래 최대치였음

< 표 1 > 2010년 기후 통계 자료와 평년편차

구분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일조시간
3~4월 중순 (평년편차)	7.1℃ (-0.6℃)	12.1℃ (-1.6℃)	2.3℃ (+0.1℃)	138.2mm (112.3%)	19.6일 (+6.7일)	247.1시간 (73%)
6~8월 말 (평년편차)	24.8℃ (+1.3℃)	29.4℃ (+1.2℃)	21.1℃ (+1.5℃)	710.0mm (101.5%)	44.2일 (+7.4일)	464.4 (87%)

자료 :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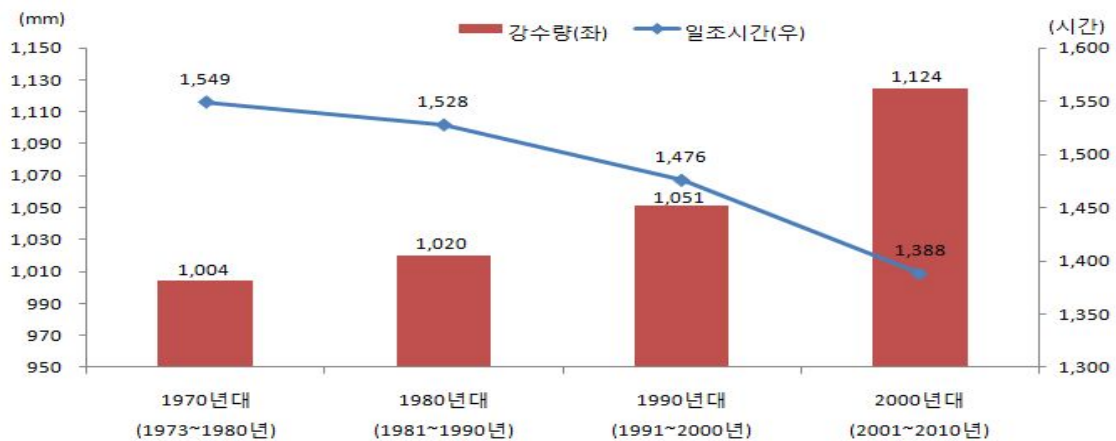
주 : 일조시간은 29개 지점 평균값임.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름
- 1~8월 전국 강수량 및 일조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 일조시간은 1,548.9시간에서 2000년대에 1,388.1시간으로 160.8시간, 약 10.4% 감소하였으며 강수량은 1,004.3mm에서 1,124.2mm으로 79.9mm, 약 11.9% 증가

50)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월평균기온이나 강수량이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것을 '기상이변'이라 정의.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007년 4차 보고서에서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상이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공식 발표. 월평균기온이 정규분포인 경우 평균값으로부터 편차가 표준편차의 2배 이상 차이가 있을 때를 '이상고온' 또는 '이상저온'이라 함

- 지난 100년간(1906년~2005년) 국내 6대 도시 평균기온이 약 1.5℃ 상승하였고 (도시화효과 20~30%), 해수면은 40년간('64년~'06년) 매년 1.9mm씩 상승
- 국내 기온상승은 지구평균(0.74℃)의 2~3배를 상회하고 있고 해수면상승 속도도 지구평균(매년 1.8mm)보다 빨라 기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상이변 현상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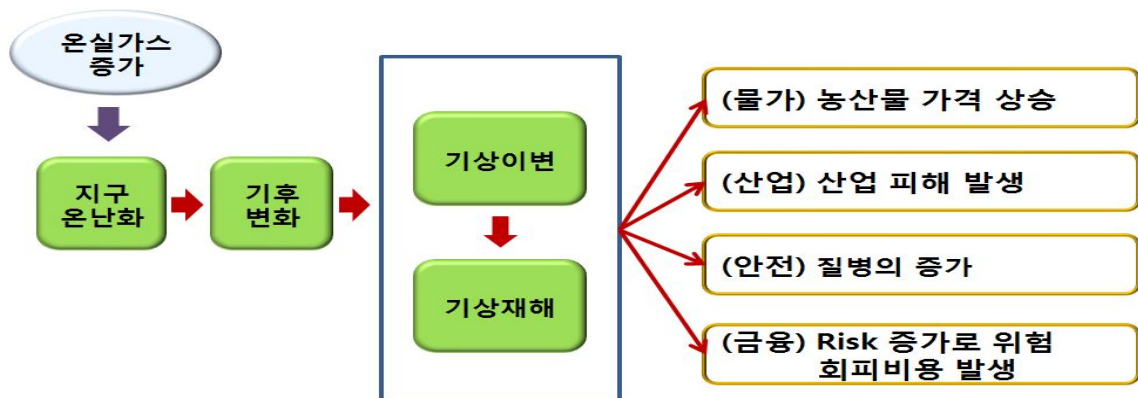
< 그림1 > 전국 강수량 및 일조시간 추이



자료 : 기상청
주 : 1~8월 평균치임.

- (기상이변 원인)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지구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 변화는 기상이변과 함께 기상재해를 발생시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침

< 그림2 > 기상이변의 원인과 파급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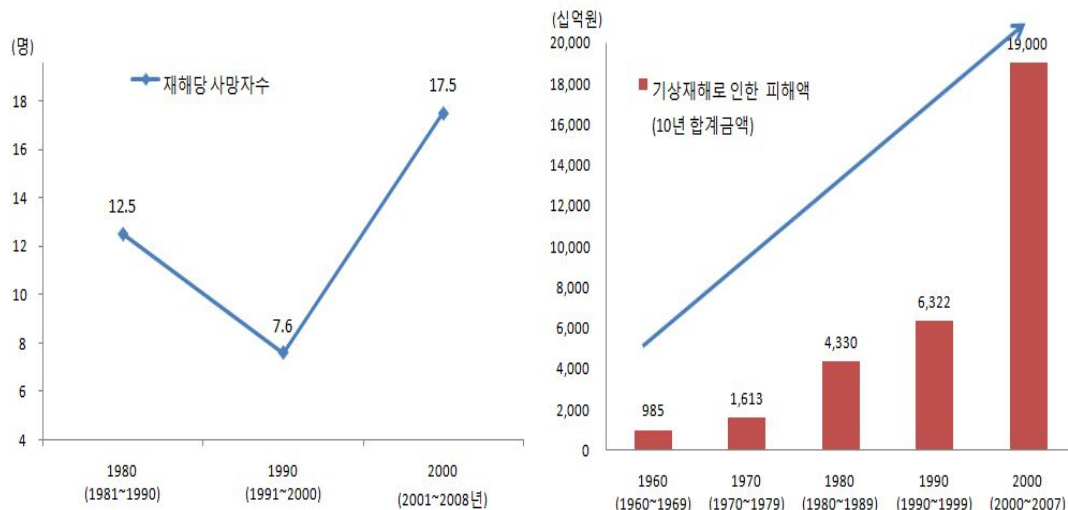


2. 국내 기상이변의 파급영향

○ (자연) 기상재해의 강도가 심해지며 피해액도 급증

- 기상재해의 강도가 커지고 있음
 - 기상재해 발생건수가 1980년대 222건에서 2000년대에 36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재해당 사망자수는 12.5명에서 17.5명으로 오히려 증가
 - 기상재해의 발생건수는 감소하였는데 재해당 사망자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재해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그림 3 > 국내 기상재해당 사망자수 및 재해 손실액 추이



자료 : 기상청(기상연보), 소방방재청(재해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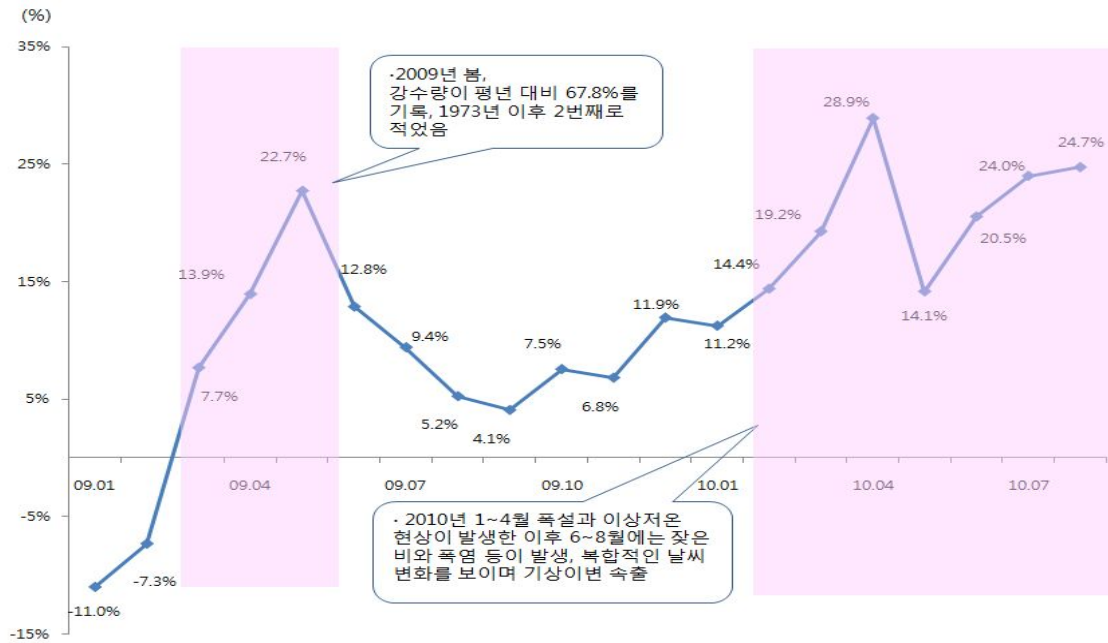
주 : 피해액은 2003년 환산가격 기준임.

-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액도 급증
 -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액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00년~'07년) 들어 19.0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1990년대 6.3조 원보다 3배 이상, 1960년대 약 1조 원보다는 무려 19배 급증
-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임
 - Swiss Re의 시그마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기상 관련 보험 손실(Insured Loss)액 규모가 1990년대 이전에는 5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최근 2008년에는 434억 달러로 8배 이상 증가

○ (물가) 기상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⁵¹⁾

- 국내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오름
 - 올해 들어 연달아 발생한 기상이변으로 기상 상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채소류의 가격이 폭등
 - 신선채소 물가지수가 2010년 4월에 전년동월대비 28.9%까지 상승한 이후 8월에 다시 24.7%까지 상승하며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그림 4 > 신선채소 물가지수 증감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2005년=100, 전년동월대비증감율임..

○ (산업) 기상이변 증가는 불확실성 및 규제 강화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기상이변의 확대는 기업의 간접적 손실로 이어짐
 - 기상상태에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나 수송업, 유통업 등은 기상이변 현상이 잦아지며 조업 중단, 생산비용 증가, 소비패턴 변화 등이 발생하여 간접적 비용 증가를 통해 손실이 확대됨

51) 평균기온은 0.5℃ 상승할 때마다, 세계 곡물생산이 3~5% 감소하며, 이로 인한 애그플레이션(농산물가격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한다. 1981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기온이 0.7℃ 상승했으며, 옥수수 수확량과 보리의 수확량이 연 4천만 톤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 예로, 올해 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봄을 겨냥해 출시된 에어컨, 여행상품, 의류 등은 판매가 부진한 반면 아웃도어나 난방기구 등의 판매는 증가하여 관련 기업들이 상품기획 및 생산계획 실패로 어려움을 겪음

< 표 2 > 산업별 기상이변의 손실발생 내용

산업	손실 유발 내용
농업	수해, 가뭄 등으로 생산량 감소, 병충해 증가
건설	공사현장 재해, 공정지연, 장비·인력 수급 차질, 시설 파손
교통	운항 중단, 안전사고 발생 증가
가전·패션·식음료	판매 급증·급감 및 재고 발생
유통	매장 내방객 및 매출 감소, 상품구상 오류
관광	매출감소, 예약 취소
에너지	냉·난방 전력 급증, 가스 사용량 급변동 등

- 재난관리에 취약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율은 99.8%로 기상재해로 인한 기업의 직접적 피해액이 연간 약 1,200억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어⁵²⁾ 간접적 피해액까지 고려할 경우 이보다 더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킴
 - 우리나라는 CO₂ 의 배출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 1인당 증가율도 1위로 미국 에너지정보협회(EIA)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편입 1순위로 한국을 지목함에 따라 엄격해진 환경기준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전망
 - 한국이 2020년에 1990년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감축할 경우, 탄소배출권구매에 드는 비용은 최저 28억 달러에서 최고 277억 달러에 이를 전망

< 표 3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담비용(전망치)

(단위 : 백만 톤, 억 달러)

연도	CO ₂ 감축량	부담 비용		
		54달러/1ton	27달러/1ton	5.5달러/1ton
2010년	395.2	213.4	106.7	21.7
2020년	513.3	277.2	138.6	28.2

자료 : 이부형(2007),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과 전망".

주1: CO₂ 감축량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삭감한 수준인 2억 360만 톤을 기준으로 계산.

주2: 2010년 CO₂ 1ton당 예상 가격을 각각 54, 27, 5.5달러로 예상했을 때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

52) 류지협(2006), "기업의 재난관리와 BCP 수립의 중요성" 참조.

○ (안전) 기상이변은 질병의 증가를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⁵³⁾

- 기상이변은 질병의 전이를 일으키는 병원체의 수와 확대에 영향을 미침
- 기후변화는 요인별로 인간에게 전이되는 병원체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매개체를 증가시키며 사람과의 접촉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발병률을 높임⁵⁴⁾
- 기상이변, 특히 홍수는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와 매개동물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과 매개동물의 접촉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전염병 유발의 기회를 증가시킴

< 표 4 > 기후변화가 질병의 확대에 미치는 영향

기후요인	모기	병원균	척추동물(쥐)
기온상승	· 발육기간 단축 · 사람과의 접촉 증가 · 일부 병원균에 대한 감수성 변화 · 개체수의 증가	· 부화율 증가 · 전이계절 증가 · 분포증가	· 따뜻해진 겨울은 쥐의 생존에 유리
강수량 감소	· 더러운 물이 고여있어 모기가 알을 낳을 곳이 증가	· 영향없음	· 사람주변으로 이동하여 접촉기회 증가
강수량 증가	· 유충서식지 및 매개동물의 증가 · 습도의 증가는 생존능력 증가	· 직접적 영향에 대한 증거 없음	· 먹이의 증가로 개체수 증가
홍수	· 홍수는 매개체의 서식지와 전이에 변화를 초래	· 영향없음	·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

자료 : IPCC 3차 보고서(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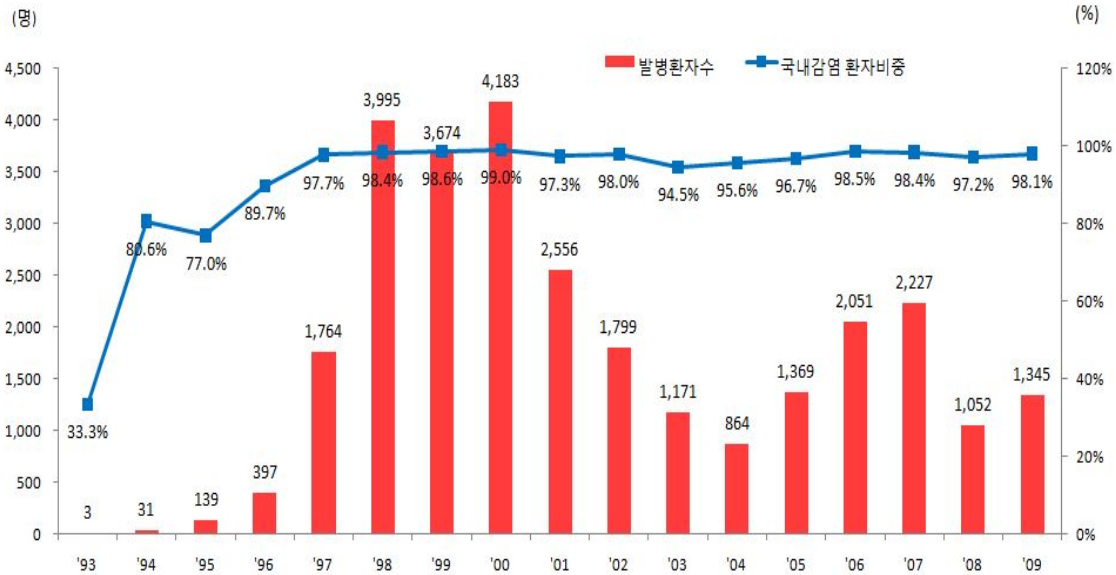
- 기상이변으로 국내에서도 관련 질병이 증가함
- 전국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아열대성 전염병의 발병 증가
- 예를 들면, 말라리아는 1993년 처음으로 3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1996년 1,764명으로 환자수가 급증하며 2000년에 4,18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이후 정부의 강력한 퇴치사업으로 2009년 현재 1,345명까지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1995년 139명에 비해 약 10배 정도 증가한 상황

53) 2003년 여름 동안 서유럽에서 발생한 흑서 현상으로 약 45,00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는데, 사망자의 대부분을 노약자와 빈곤층, 그리고 유아였음.

54) 땀기열도 6건('01년)에서 34건('05년)으로 급증

- 또한 해외로부터 감염된 환자비중은 1~2%대로 매우 미미한 반면 국내 감염 환자 비중이 98% 이상을 차지해 대부분이 국내발병 환자인 것으로 드러남

< 그림 5 > 국내 말라리아(아열대성 전염병) 발병 추이



자료 : 질병관리본부

- 우리나라의 온도가 섭씨 1℃ 상승할때 5가지 전염병의 평균 발생률은 4.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⁵⁵⁾
- 기온 상승에 따른 전염병 발생 영향은 쯔쯔가무시(5.98%), 렙토스피라(4.07%), 말라리아(3.40%), 장염비브리오(3.29%), 세균성이질(1.81%)의 순으로 나타남

○ (금융) 기상이변으로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위험회피를 위한 비용 발생

- 다양한 이상기후 관련 보상·복구 범위가 제정되고 보험료와 보험계약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⁵⁶⁾, 풍수해보험⁵⁷⁾, 어선 재해보험 등 관련 보험상품들이 개발됨

5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기후변화와 건강 적응대책'에서 2005~2007년 3년 동안의 전염병 발생을 기준으로 온도변화에 따른 전염병 발생을 예측한 결과임.

56) 2001년에 제정,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농작물의 담보수준을 수확량의 70~80%까지 할 수 있음.

57) 2006년 제정된 '풍수해보험법'에 의해 2006년 5월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61~68%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90%까지 보장.

- 국내 자연재해 관련 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의 보험료가 2006년 약 6억 원에서 2009년 81억 원으로 1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6년 5월~2008년 3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어오다 20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민간보험사가 사업자로 추가됨에 따라 계약건수가 급증함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는 2006년 576억 원에서 이후 농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 다시 증가하며 2010년 8월말 현재 784억 원을 기록, 약 1.4배 증가
- 보험료와 함께 계약규모와 가입률도 꾸준히 상승,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회피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표 5 > 국내 자연재해보험의 연도별 주요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률	2.7%	2.0%	5.0%	14.1%	-
	계약건수 (건)	17,487	20,563	243,434	348,983	-
	보험료 (백만원)	606	1,274	7,394	8,102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24.0%	25.7%	28.5%	31.4%	36%
	계약면적 (ha)	21,466	22,950	24,009	26,388	30,139
	보험료 (백만원)	57,627	55,401	54,233	57,232	78,440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

주1 : 풍수해보험의 2009년 보험료는 현재 결산중으로 정확한 집행금액을 알 수 없고, 속보치를 받아 집계한 예측치임.

주2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보험가입면적 / 가입대상지역 전체 경작면적 × 100.

풍수해보험 가입률(통합보정가입률) = 3개 시설물별(가입률 × 보험료) / 3개 시설물 보험료이며 3개 시설물은 주택, 축사, 온실임.

3. 시사점과 과제

○ 지역사회의 재해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 기상이변에 대한 취약성은 저소득층과 슬럼지역일수록 더 심각하므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능력 강화가 시급
 - 아래와 같은 水防인프라 투자는⁵⁸⁾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보시스템 구축, 재난대피 훈련 생활화, 재난교육 실시, 관련 인프라 투자 등이 시급
 - 기상이변에 대한 적응능력이 특히 떨어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배수시설, 도로, 건축물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중요

< 표 6 > 서울시 水防시설능력 향상 4개년 계획(안)

(단위: 억 원)

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빗물펌프장 증설	52개소 증설	4,645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보강	111개소 보강	222
하천제방 보강	13개 하천, 28km	656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 확장 및 정비	4,500
합 계		10,023

자료: 서울시,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2007-2010) 계획, 2007.12.12

○ 정확한 기상예측시스템 구축

- 정확한 기상예측시스템 구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상예측용 슈퍼컴퓨터 추가 도입 등 투자 확대가 필요함
 - 기상이변 대응을 위한 기상연구소의 2010년도 R&D 예산이 우리가 169억 원이며 미국이 3,541억 원, 일본은 391억 원으로 각각 우리의 21배, 2.3배 수준으로 우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58) 서울시는 2007년6월13일 "현재 시간당 처리능력이 75mm인 시내 빗물펌프장의 배수용량을 2010년 말까지 시간당 95mm로 개선하는 등의 수방시설 보강 4개년 계획을 추진한다"면서 "국지성 폭우 등 기상이변이 잦아짐에 따라 현재 10년 빈도의 강우에 맞춰 설계된 수방시설을 30년 빈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브리핑한바 있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x?contents_id=MYH20070613008500355)

- 슈퍼컴퓨터 보유현황⁵⁹⁾에서도 미국이 277대, 중국과 일본이 21대와 16대인 것에 비해 한국은 2대로 약 0.4%의 비중을 차지, 미미한 수준을 보였으며 인원이거나 1인당 사업비 측면에서도 선진국에 뒤떨어짐

< 표 7 > 2010년 국외 기상연구소와의 R&D 예산 비교

(단위 : 억원, 명)

구분	국립기상연구소	미국 해양대기연구소 (기상부문)	일본 기상연구소
예산	168.6	3541.6	390.5(2008년)
정원	70	598	150
1인당 사업비	2.4	5.9	2.6

자료 : 기상청.

주 : 환율은 1USD=1200원, 100JYP=1300원으로 계산함.

○ 건축·시설물의 안전기준 강화 및 '기후친화형' 주택 보급

- 강풍과 폭우, 폭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 교량, 건물, 주택 등 시설물의 준공허가 및 개보수 기준을 강화
- 통풍과 냉방, 보온이 잘 되는 고효율·저에너지 주택, 기후변화에 내성이 강한 페인트 등 건자재를 활용하는 '기후친화형' 주택을 보급

○ '기후중립적' 농법의 개발 및 보급

-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수확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후중립적' 농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및 시설 투자를 지원
 - 기후변화에 강한 新품종 및 新농법 개발
 - 강풍이나 우박에도 견딜 수 있는 유리온실 등 시설농업에의 투자 확대

○ 기상이변에 대한 적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 예방대책 수립

- 최근의 신종플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수공통전염병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59) TOP 500 Supercomputing Sites(www.top500.org).

○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뉴 비즈니스' 지원

- 최근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을 통해 기상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상기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뉴 비즈니스를 육성
 - 기상정보 관련 민간서비스업 육성
 - 기상이변과 관련된 보험상품 개발 등 보험업 지원
 - 물류나 유통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안전에 투자
- 국내 기상산업은 2009년 현재 443억 원 정도의 수준이지만, 기상이변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문적 기상 정보를 요구하는 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라 2014년에는 1,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됨

전 선 형 연구 원 (2072-6214, shjeon@hri.co.kr)

김 동 열 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일본의 2030년 경제발전전략⁶⁰⁾

1. 지금 왜 일본에 국가전략이 필요한가?

○ (구조개혁의 필요성) 구조개혁이 필요한 일본의 사회경제시스템

- 2008년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일본에도 그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으며, 사회경제시스템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되었고 2015년부터는 세대수의 감소도 시작될 예정인바, 이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은 자칫 일본을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의 제조업중심 분업구조를 향후에는 需給 兩面에서의 '동아시아 공동체'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으며, 2010년 민주당 정부의 집권 이후 官-民, 중앙-지방의 관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20년 週期的 구조변화) 20년마다 도래하고 있는 일본의 구조변화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약20년마다 커다란 구조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음
 - 1970년대 초반에는 제1차 석유위기, '90년대 초반에는 버블경제의 붕괴와 급속한 円高가 일본을 뒤흔들었으며 사회경제시스템도 크게 변화했음
 - 특히,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 초반에는 重厚長大型 산업에서 輕薄短小型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90년대 초반에는 제조업의 글로벌화를 가속시켜 아시아 域內에서의 국제분업 구조를 구축함
- 2008년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경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과제

60) 特集 「今求められる日本の長期國家戰略」, 知的資産創造, 野村總合研究所, 2010年8月号, pp4~47를 번역, 편집한 것임.

- '90년대 초반이후 20여년만에 다시 찾아온 구조변화의 압박을 계기로 삼아 향후 20년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사회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함
- 지금까지 일본경제의 부흥을 이끌어왔던 자동차산업이나 전기산업 이외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을 진흥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국가전략의 내용과 중요성) 일본과 같은 선진국, 성숙사회에서도 국가전략은 대단히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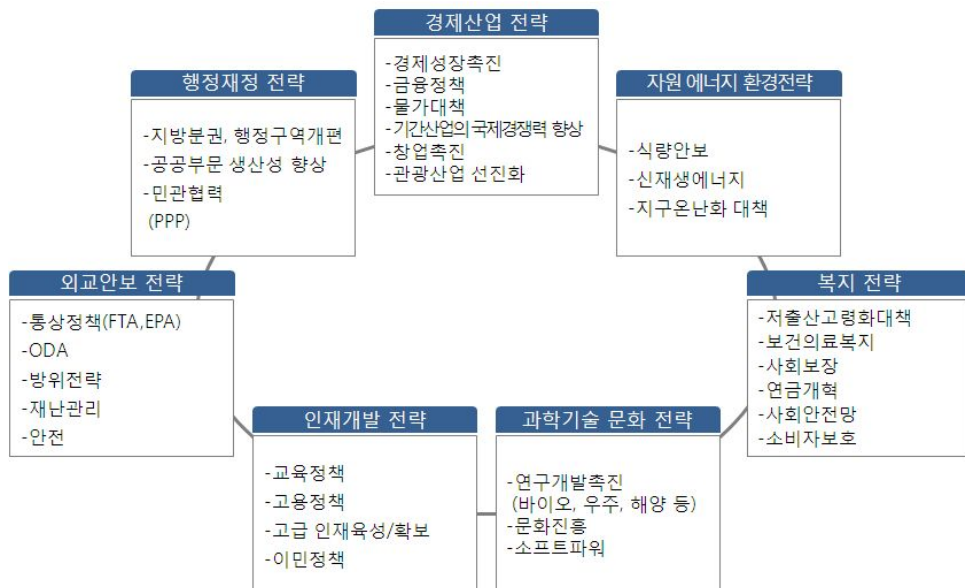
- 국가전략이란 국가의 존속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배분의 목표와 방향성, 수단 등을 국가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 국가전략은 사회경제시스템이 정비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유효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성장발전을 이룩한 국가에서도 매우 중요함
- 영국의 대처 수상은 '작은 정부' 구상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정보화 슈퍼 하이웨이', 오바마 대통령은 '그린 뉴딜'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제시함
- 2010년6월 일본 민주당 정부는 '신성장전략: 건강한 일본의 부활 시나리오'를 공표하고, '2% 이상의 실질경제성장' 등 향후 정책운영의 방향을 제시함

- 국가전략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략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

- 국가전략의 대상영역은 경제산업전략, 행정재정전략, 자원에너지환경전략, 과학기술문화전략, 외교안보전략, 인재개발전략, 복지전략 등으로 구성됨

< 그림. 국가전략의 대상 영역 >



○ (일본의 2030년 국가전략) 일본에게 있어서 2030년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에 대비한 국가전략이 필요함

- 일본에게 있어서 2030년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부양인구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하고, 인도가 일본의 GDP를 추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

- 급속히 성장하는 아시아의 활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
- 일본 제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과 사람-제품-자금-서비스 등의 교류를 어떻게 심화시켜 나갈 것인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2010년 이후 일본 국가전략의 중요한 내용
- '2030년 일본'을 위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 실천방안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

<표> 2040년까지의 로드맵 (일본 인구나 세계경제)

		2010	2020	2030	2040년
일본 인구동향	인구	12,718만 명	12,273만 명	11,522만 명	10,569만 명
	생산연령인구 (20-64세)	7,522만 명	6,803만 명	6,305만 명	5,360만 명
	종속인구 지수	69.1	80.4	82.7	97.2
세계 동향	인구	69억 명	77억 명	83억 명	86억 명
	중국, 인도 동향	중국GDP가 일본 추월		-인도 인구, 세계 1위로 -인도 GDP, 일본과 비슷 -중국 인구, 감소하기 시작	
기술-시장 동향			-아시아 역내 전자상거래, 1000조 원 규모로 성장 -인도가 세계 3위 석유 가스 수입국으로 성장 -중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 수입국으로 성장		

- 자동차·전기와 비슷하거나 능가하는 새로운 수출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일본의 환경대책과 보건의료복지 등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는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활용 가능할 것임
- 또한, 2005년 일본의 소득수지 흑자는 무역수지 흑자를 추월했으며, 제품을 팔아 외화를 얻는 시대에서 해외투자를 통해 외화를 버는 시대로 변화
- 새로운 수출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원유와 곡물 등의 수입을 줄여나가는 대책도 수립되어야 함

2. 일본경제의 장기전망과 경제발전 전략의 방향성

○ 동아시아의 성숙화에 의해 전환점을 맞이하는 2030년 세계경제

- 전환점을 맞이하는 세계 인구 동향 : 세계 인구는 2010년 약69억 명에서 2030년 약83억 명으로 계속 증가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동아시아는 인구 증가 국면이 멈추고,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미는 인구 확대가 계속됨
 - 중국이 '한자녀 정책'에 의해 2030년경에는 일본처럼 인구감소사회로 이행하며, 동아시아 인구는 2030년 16.7억 명에서 2050년 16.0억 명으로 감소
 - 한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인구대국을 지닌 남아시아의 인구는 급증하여 2030년에 22억 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인도는 2030년에 약14.9억 명으로 중국의 14.6억 명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될 전망

< 2010, 2030, 2050 지역별 인구 변화 >

(단위: 억 명)

		2010	2030	2050
아시아	동아시아	15.6	16.7	16.0
	동남아시아	5.9	7.1	7.7
	남아시아	17.8	22.3	24.9
	서아시아(중동)	2.3	3.1	3.7
미주	북미	3.5	4.1	4.5
	중남미	5.9	6.9	7.3
유럽		7.3	7.2	6.9
아프리카		10.3	15.2	20.0
합 계		68.6	82.6	91.0

- 세계경제의 중심이 구미에서 동아시아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
 - 일본은 2010년에 명목GDP 기준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이래, 2030년경에는 인도에 의해서도 추월당할 전망
 -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2030년경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하여 명실 공히 G2 시대를 맞이할 전망
 - 지역별GDP 구성비를 보면, 2010년 유럽이 세계 GDP의 32.1%, 북미가 27.3%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동아시아가 23.3%로서 유럽의 22.5%와 북미의 19.2%를 넘어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VISTA(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아르헨티나)의 GDP 총액도 G7(선진 7개국)의 GDP 총액과 비슷해짐
- GDP규모로 본다면, 동아시아지역과 신흥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될 전망

< 세계GDP의 지역별 구성비 변화 예측 >

(%)

	2010년	2030년
유럽	32.1	22.5
북미	27.3	19.2
중남미	7.1	10.9
동아시아	19.1	23.3
동남아시아	2.6	4.4
중앙-남아시아	3.7	8.0
서아시아	3.7	4.8
대양주	1.8	1.3
아프리카	2.7	5.6

- 에너지, 물, 식량을 둘러싼 국제경쟁의 심화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물과 식량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환산톤으로 2007년 120억 톤에서 2030년 168억 톤으로 약40% 증가할 전망이며, 석유가격은 2020년 배럴당 100달러, 2030년 배럴당 115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30년에는 곡물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여 수급의 밸런스가 깨지게 됨

○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국난을 맞이하는 2030년 일본 경제

-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총인구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 총인구는 2030년까지 20년 동안 9.4% 감소 : 일본의 총인구는 2010년 1억 2,718만 명에서 2030년 1억 1,522만 명으로 1,196만 명(9.4%) 감소할 전망
- 생산연령인구는 16.2% 감소: 20~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2010년 7,522만 명에서 2030년 6,305만 명으로 1,217만 명(16.2%), 크게 줄어들 전망
- 전환기를 맞이하는 일본의 고령화

- **2030년경에 재상승하는 종속인구지수:** '19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합한 종속인구를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종속인구지수가 2005년 약64%에서 2015년 약77%로 상승(제1기), 2030년까지 80%부근에서 안정(제2기), 2030년부터 재상승 2040년 100%, 2055년 110%에 이를 전망(제3기)
 - 2040년이 되면, **현역세대 1인이 연소자 및 고령자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 **사회 전체의 대대적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1인당 GDP, 즉 국민의 생활수준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年少인구를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현역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경제성장 지속되어야**
 - 公的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려면 최소한 '실질GDP 1%, 명목GDP 2% 성장'이 달성돼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일본경제는 '실질 0.8%, 명목 -0.4% 성장'하는데 그침
 -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감소하는 개인 금융자산**
 - 저출산·고령화와 고령자의 '예금 까먹기'가 진행됨에 따라, 2030년의 개인 금융자산은 2008년 대비 약 330조엔 감소할 전망
 - 현재의 자금수요 규모가 불변(1920조 엔)이라고 가정해도, 2030년 시점에서 약240조 엔의 자금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2030년말의 자금조달 구조 >

(단위: 조 円)

2008년말의 자금조달구조				2030년말의 자금조달구조			
자금조달 1920		자금공급 1990		자금조달 1920		자금공급 1680	
가계	차입 300	개인 금융자산 1530	국내 자금	가계	차입 300	부족 (240)	
기업 (非금융)	차입 400			기업 (非금융)	자본 350	개인 금융자 산 1200	국내 자금
	자본 350	정부	공채 870			공적연 금 적립금 180	
정부	공채 870	공적연금 적립금 160	해외 자금	정부	공채 870	300	해외자금
		300					

- 개인금융자산의 감소와 국내자금 부족으로 기업과 정부의 자금조달 경쟁이 벌어지면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며, 고령사회에 의료비와 사회보장비의 경제적 지출을 삭감하기도 쉽지 않은 바, '명목 2%의 성장'이 필수 불가결함

○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도약('2%성장 시나리오')이 필요한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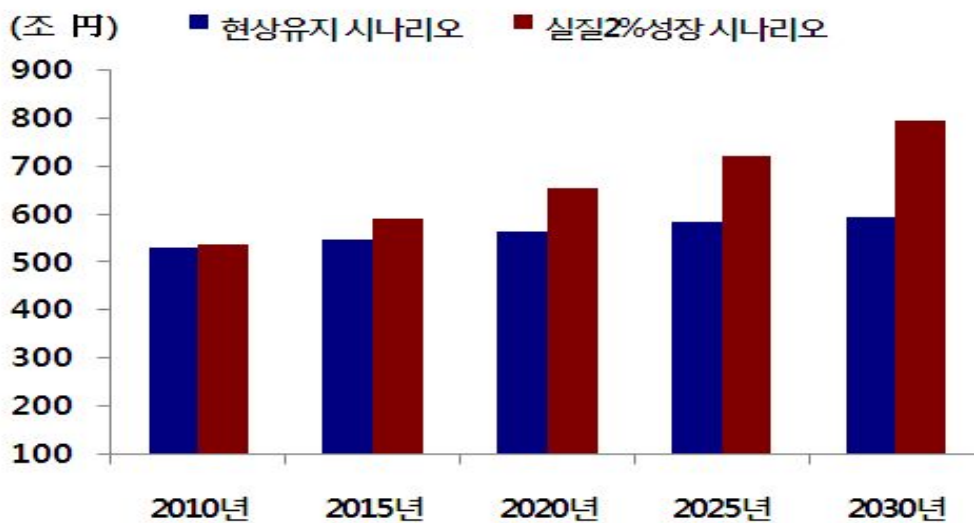
- 국가로서의 프레임워크 유지에 필수적인 경제성장

- 2008년말 현재 약870조 円(GDP의 170%)에 달하는 국공채를 감당하고, 공적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등 국가로서의 프레임워크를 지탱하기 위한 **최저한의 요건은 '실질 1%, 명목 2%'의 성장을 실현하는 것임**

- 경제성장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신산업 창출, 시장개척, 생산성 향상

- 2009년12월 하토야마 내각의 '신성장전략(기본방침)'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평균 '명목 3%, 실질 2%'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음
- '실질2%성장 시나리오'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2030년에 일본의 GDP는 약 800조 엔에 도달하며,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약600조 엔에 그침
- '실질기준 2%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트렌드와 결별하고, **대대적인 구조변화가 필요하며, 내수주도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음**

<'GDP2%성장 시나리오'와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2030년 결과 비교>



주: '현상유지 시나리오'란 취업자 1인당 생산성 향상을 1990~2008년 평균과 같은 정도로 가정한 것

○ 내수(內需) 주도에 의한 성장전략의 한계

- 정점에 도달한 일본의 가계소비(GDP의 약60%를 차지)
 - 2009년 총무성 '가계조사'를 토대로 2030년까지 가계소비 증감을 2010년과 비교해보면, 인구감소의 와중에도 2015년까지 세대수는 증가하며, 2015년의 가계소비는 2010년에 비해 약1조5천억 엔 증가할 전망
 - 그러나, 2015년 후 세대수 감소가 시작되면 '주거' 및 '교통-통신' 항목의 소비가 대폭 감소하고, 2025년 가계소비지출의 총액은 2010년과 비슷해지며, 2030년에는 2010년보다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계됨

- 저하 경향이 계속되는 주택투자, 공공투자, 기업 설비투자
 - GDP의 약20%를 차지하는 총고정자본형성 가운데 '주택투자'는 세대수 감소 국면에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1996년을 피크로 대폭 감소하고 있음
 - 공공투자도 정부에 의한 공공사업의 삭감에 의해 1995년경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여 2008년에는 1995년의 약50% 수준으로 하락함
 -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는 주택투자나 공공투자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며, 1990년경을 정점으로 일단 하락했다가 서서히 회복하여 2008년에는 실질기준으로 1990년 수치를 넘어섰음
 - 설비투자의 향후 전망도 밝진 않은 바, 제조거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거점도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으며, 서비스산업에서도 중국 연안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

-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 2008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잔고(스톡)의 GDP 대비 비중은 4.1%로서 2000년의 1.1%에 비하면 커지고 있지만, 선진국 평균 24.7%나 세계 평균 24.5%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수준
 - 영국의 36.9%, 프랑스의 34.7%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미국의 16.0%, 한국의 9.8%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

- '내수' 또는 '외국자본 도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법인세율 개정 등은 정부가 시급해 착수해야 할 과제
- **인구규모 축소와 상대적 시장규모 축소**라고 하는 2가지의 축소에 직면한 일본경제가 **성장의 기점을 국내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분명**

○ '아시아와 함께 번영'하는 외수(外需) 주도형 성장의 실현

- 아시아의 外需를 타겟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수립

- 아시아의 外需를 목표로 잡은 3가지 이유는 (1)높은 성장 가능성, (2)제조업의 직접투자를 통해 구축된 긴밀한 네트워크, (3)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 아시아와 일본의 상호 보완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번영을 지향

-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비효율과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바, 일본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아시아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일본과 아시아가 함께 번영하는 방식
-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의 향상, 고효율의 물(水)이용 시스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상품과 서비스,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이 일본이 지닌 솔루션을 아시아 각국에 제공함으로써 아시아와 일본이 동반 성장하는 전략
- 아울러, 기능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서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하며, 역내 시장의 통합과 효율화를 촉진하는 아시아 공통의 규칙 제정, 소비자 교육, 인프라편드를 활용한 지역간 인프라구축 등 일본이 담당해야할 역할은 무궁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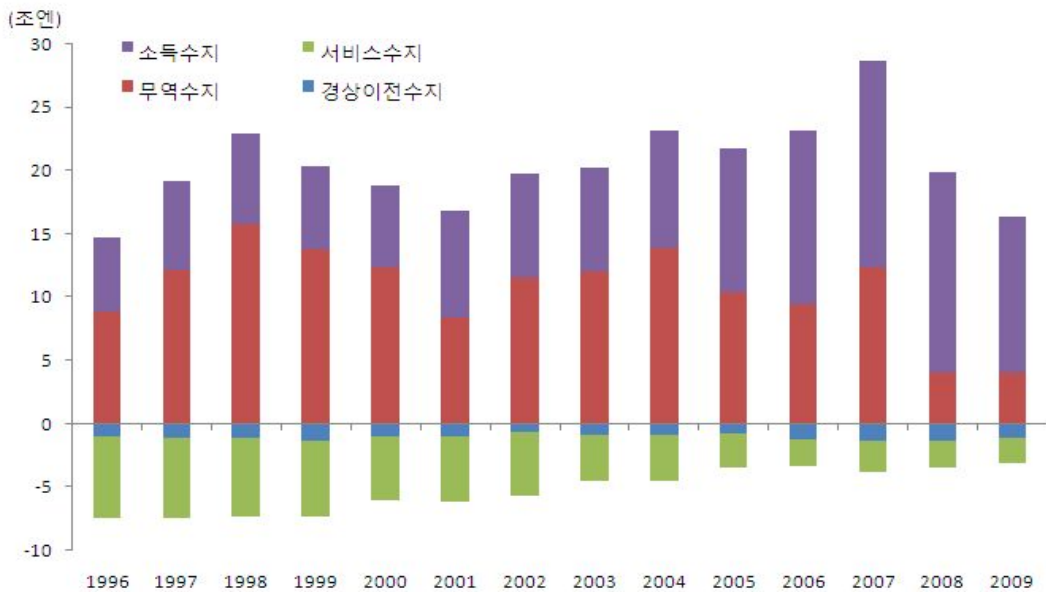
3. 2030년을 향한 일본의 경제발전 전략

○ 수출 증가, 수입 감소, 대외투자 증가의 3가지 발전전략이 필요함

- 무역수지의 흑자폭이 과거처럼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가 동시에 필요하며, 소득수지 흑자를 늘리기 위해 대외투자 확대가 필요
- (수출 증가)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을 향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생산 확대를 유인하고 법인소득을 증가시킴

- (수입 감소) 수입을 감소시켜 국내공급으로 대체함으로써, 해외로의 소비 유출을 억제하고, 법인소득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연결시킴
- (대외투자 확대) 수출 증가로 얻은 외화를 토대로 대외자산액을 늘리고, 그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투자수익을 더욱 확대시키며, 일본의 풍부한 개인 금융자산을 대외투자로 적극 유인함으로써 투자수익의 확대가 가능

<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 >



자료 : 일본은행, '국제수지통계'

3-1. 아시아 경제의 활력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수출' 전략

- 선진국 중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이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
 - 2008년 기준 일본의 수출의존도는 16.1%로 미국의 9.1%보다는 높지만, 한국 45.4%, 독일 39.9%, 중국 33.0%, 캐나다 29.9%, 이태리 23.7%, 프랑스 21.1%, 영국 17.1% 보다 낮음
 - 수출 확대의 주요 목표는 성장이 두드러진 아시아
 - 1990년대 후반까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세계의 제조거점으로 성장했던 아시아는 2000년 이후 시장으로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미주,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수정이 필요한 일본의 '對아시아' 수출 전략

- 2000년대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은 (1)자동차 및 관련 부품, (2)전기·IT 관련 기기의 2개 분야였으나, 한국과 기타 신흥국이 많이 추격해 왔음
-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술력도 급속히 향상시킴에 따라, 현재 일본이 강한 소재 및 부품, 공작기계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신흥국에 따라잡힐 것임
- 2030년에는 기술력에 더해 일본의 경험지 및 사회·문화시스템을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삼아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일본의 3가지 '新수출전략'

- (1)經驗知 활용형 수출전략: 급속한 경제성장과 안정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제발전 궤적을 아시아 각국이 비슷하게 따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문제의 해결에 일본의 경험지가 장점(우위)을 보유. 예를 들면, '도시 인프라', '공해·환경대책', '저출산·고령화대책', '농수산업 기술' 등
- (2)라이프스타일 제안형 수출전략: '日製=고품질, 최첨단'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중국과 한국에 의해 많이 추격당하고 있으므로, 향후 '日製=건강, 친환경(생태), 세련'과 같은 일본인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이미지를 강화하여,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부여하고, 상품가치를 높이고, 수출 증가로 연결시킴
- (3)규칙선도(Rule Initiative)형 수출전략: 예를 들면, 에너지가 부족한 일본에서 '에너지절약형 제품 기준'을 선도적으로 제정하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제품시장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 일본에 유리한 제도 및 규격이 선정되도록, 産-官-學이 일체가 되어 상대국가의 정부 또는 전문가와 연결하려 노력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리드해야 함

3-2.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한 '수입 감소' 전략

- 일본에서 소비할 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없는 수입품목의 총액이 증가할수록 GDP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므로, 향후 이러한 품목의 수입총액을 삭감하는 것이 중요
- 수입총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석유 등 광물성 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효율화'하고 '대체화'하려는 노력이 중요

- 수입 삭감을 위해 구축되는 제도 및 '경험지'는 향후 규칙선도(를 이니셔티브)형 및 경험지 활용형 수출전략에 활용될 수 있음

<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수입품목별 비중 >

순위	수입 품목	비율(%)	분야
1	원유	14.6	광물/자원
2	의류 및 부속품	4.5	기계/전자/기타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4.2	기계/전자/기타
4	액화 천연가스	4.0	광물/자원
5	전산기 및 주변기기	3.5	기계/전자/기타
6	어패류	3.0	식료품
7	비철금속	2.9	광물/자원
8	석유제품	2.5	광물/자원
9	과학광학기기	2.4	기계/전자/기타
10	석탄	2.4	광물/자원

주: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입총액(531조円)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수입액의 비율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3-3.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투자 확대' 전략

- 일본의 소득수지 증가와 2가지 문제점

- 일본은 1980년대 이래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외화를 대외자산 축적에 활용해 왔으며, 이들 자산이 창출하는 이자 및 배당 등 자산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수지 흑자가 확대되어 왔음
- 일본의 소득수지 관련 2가지 문제점: (1)다른 선진국(4% 전후)에 비해 일본의 대외자산 수익률(3% 전후)이 낮은 수준이며, (2)대외자산 잔고(스톡) 규모는 2008년 기준 약520조 엔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적은 수준

< 일본의 소득수지 확대를 위한 과제 >

	대외자산 수익률	대외자산액 (잔고)
일본	3% 내외 (2000년대 평균)	約 520조 円 (2008년)
선진국	4% 내외 (2000년대 평균; 영국/미국)	約 2,000조 円 (미국, 2007년) 約 940조 円 (영국, 2008년) 約 880조 円 (프랑스, 2007년) 約 620조 円 (독일, 2008년)

- 일본의 대외자산수익률이 낮은 3가지 이유: (1) 선진국에 비해 직접투자 비중이 낮고, 수익률이 낮은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음, (2) 수익률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적고, 수익률이 낮은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많음, (3) 직접투자로부터의 수익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음
- 일본의 대외자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투자 비율을 늘리고, 투자대상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을 높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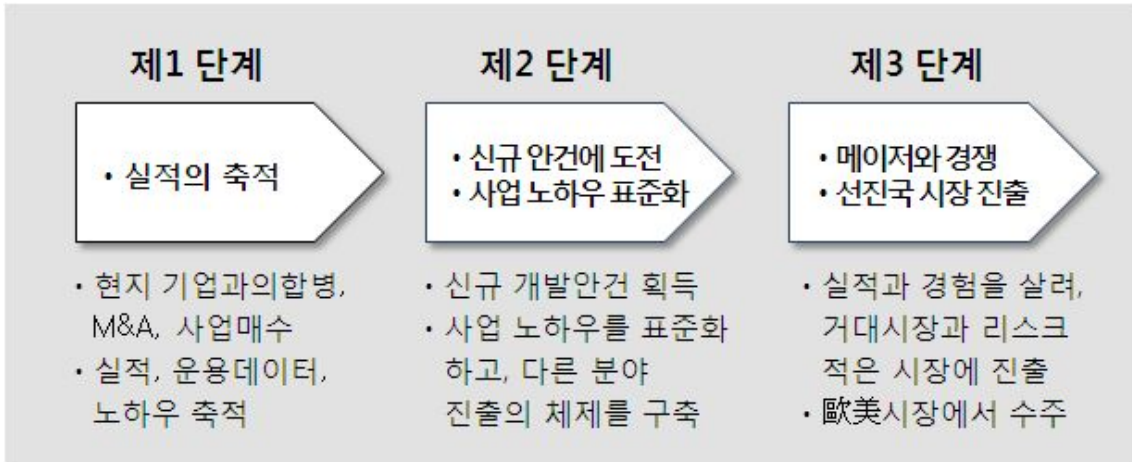
- 일본의 소득수지 확대 방안

- (1)아시아 각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확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인수합병(M&A) 형태의 투자를 늘리며,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과 도시개발과 같은 비제조업 분야에서의 종합사업을 전개해야 함
- (2)직접투자의 확대에 필요한 종합사업형 투자모델의 확립: 생산이나 판매와 같이 특정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사업프로세스 전반에 투자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종합사업형 투자모델을 확립

- 컨트랙터(contractor, 도급업자) 주도형 전략

- 컨트랙터 주도형 전략의 필요성: 신흥국의 기술력이 급속히 발달하여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현재 일본기업이 종래와 같이 기술우위의 강점을 살려 제품판매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함.
- 민간참여의 여지가 있는 도시 인프라 개발, 수도사업, 지역개발 등에 참여하여 경영권이나 사업권을 획득하여 사업 전체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컨트랙터'(contractor) 주도형 전략을 구사
- 일본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교통인프라 개발, 도시개발, 수도사업 등 종합사업을 수주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함
- '컨트랙터' 주도형 사업의 경우, 기존의 제품판매 사업이 아니라 '투자'로서 사업을 위치지워야 하며, 제품이나 시스템의 판매단계가 아니라 '운영'단계에서 이익이 발생함
- 2030년을 향한 컨트랙터 주도형 전략의 3가지 단계: 컨트랙터 주도형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1)실적의 축적, (2)신규 안건에의 도전, (3)메이저와의 경쟁 등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갈 필요가 있음

< 컨트랙터(contractor) 주도형 전략의 3단계 추진 방안 >



- '신 성장전략'의 실현을 위한 조건들

- 2010년 6월 민주당 정권은 '신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의 실현을 주장하지만, 강한 재정과 강한 사회보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강한 경제'가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함
- 정부와 기업과 국민 3者 모두가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전략을 실천함에 있어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함

김동열 연구위원(2072-6213, dykim@hri.co.kr)